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행정학석사 학위논문

국가재무제표의 회계오류가
보수적 회계선택에 미치는 영향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이 해 인

국가재무제표의 회계오류가 보수적 회계선택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김 봉 환

이 논문을 행정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9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이 해 인

이해인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12월

위 원 장 _____ 김준기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김병조 _____ (인)

위 원 _____ 김봉환 _____ (인)

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가재무제표의 회계오류가 보수적 회계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평가와 종합적 정보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재무제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그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관련 실증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국가회계에 발생주의가 도입된 이후 9년간 오류액은 총 200조원이었는데 회계오류는 재무제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감소시켜 회계품질이 하락한다. 이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회계보수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 회계보수주의, 즉, 보수적 회계선택이란 수익이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을 더 빨리 반영하는 것으로서 정부와 국민 사이의 정보비대칭을 완화하여 대리인비용을 줄이고, 오류로 인해 저하된 회계품질을 회복하게 한다. 이로써 정부는 회계책임을 실현할 수 있기에 회계오류가 많이 발생할수록 이듬해의 보수적 회계선택이 강화될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1개의 원, 17부, 4처, 14청, 4위원회, 2개의 기타로 구성된 42개의 중앙관서이며, 기간은 2011회계연도부터 2020회계연도이다. 독립변수인 회계오류는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 보고 여부, 금액, 비율 및 감사원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오류 건수로 측정하였고, 종속변수인 보수적 회계선택은 단기미수채권 대 손충당금 비율, 손익 인식 관련 보수주의 계정과목과 자산 평가 관련 보수주의 계정과목 금액으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국가재무제표의 회계오류가 많을수록 다음 연도의 보수적 회계선택이 강화되었다.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의

보고 여부, 금액과 비율은 단기미수채권 대손충당금 비율과 손익 인식 관련 보수주의 계정과목 금액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감사원 결산검사 시 지적된 오류 건수는 손익 인식과 자산 평가 관련 보수주의 계정과목 금액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부처 유형 중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일 경우,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의 보고 여부와 금액이 손익 인식 관련 보수주의 계정과목에 미치는 영향이 강해져 조절 효과를 나타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부처의 회계오류와 회계보수주의 측면에서 국가재무제표의 회계품질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제시하였다. 회계오류가 이듬해 보수적 회계선택을 강화한다는 결과는 국가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국민과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며, 궁극적으로 공공 회계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한다는 점을 알려준다. 또한, 부처 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주요 고객이 정부인 기관일수록 국민과의 높은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회계오류 발생에 대한 대안으로 회계보수주의라는 장치를 이용한다는 점을 파악했다. 이처럼 본 연구는 질적 분석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공공 부문 회계오류에 관해 계량적 분석을 시행하여 관련 문헌을 확장하였고, 국가 회계품질 평가의 방법론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존재한다.

주요어 : 국가회계, 국가재무제표, 회계오류, 보수적 회계선택, 회계책임

학 번 : 2021-23038

목 차

제 1 장 서론: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4
제 1 절 이론적 논의	4
1. 국가회계와 국가재무제표	4
2. 회계오류	8
3. 보수적 회계선택(회계보수주의)	11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4
1. 민간·공공 부문 회계오류에 관한 선행연구	14
2. 민간·공공 부문 회계보수주의에 관한 선행연구	16
제 3 장 연구 설계	19
제 1 절 연구가설 설정	19
제 2 절 연구방법	24
1. 표본 선정, 자료와 연구방법	24
2. 변수 설정	25
1) 독립변수	25
2) 종속변수	26
3) 통제변수	28
4) 조절변수	29
3. 분석 틀과 연구모형	33
제 4 장 실증분석 결과	35
제 1 절 기술통계량	35
제 2 절 회귀분석 결과	40

1. 국가재무제표의 회계오류가 보수적 회계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40
2. 국가재무제표의 회계오류와 보수적 회계선택 관계의 조절효과	47
제 5 장 결론	55
제 1 절 연구 요약 및 함의	55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58
참고문헌	60
Abstract	65

표 목 차

[표 1] 국가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	5
[표 2] 국가회계 결산 과정	6
[표 3] 중앙부처별 감사원 결산검사 지적 오류 건수(누적)	10
[표 4] 분석대상 중앙관서 명단	25
[표 5] 정부 대상 부처와 국민 대상 부처	30
[표 6]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	30
[표 7] 변수의 측정 및 출처	31
[표 8] 중앙관서의 회계오류 합계 변화	35
[표 9]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 보고 기관	36
[표 10] 기술통계량	36
[표 11] 감사원 유형별 회계오류 지적 건수	38
[표 12] 다중회귀분석 결과 1 (가설 1)	41
[표 13] 다중회귀분석 결과 2 (가설 1)	43
[표 14] 다중회귀분석 결과 3 (가설 1)	44
[표 15] 조절효과 회귀분석 결과 1 (가설 2)	48
[표 16] 조절효과 회귀분석 결과 2 (가설 2)	50
[표 17] 조절효과 회귀분석 결과 3 (가설 2)	52

그 립 목 차

[그림 1] 국가재무제표의 오류 금액 추이 현황	10
[그림 2] 연구의 분석 틀	33

제 1 장 서론: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2009년 시행된 국가회계법에 따라 2011년부터 복식부기·발생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가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다양한 재정활동을 수행하는데, 그 결과물인 국가재무제표는 재정의 효율적인 평가와 종합적 정보 제공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은경, 2020). 그만큼 국가재무제표의 품질을 제고하는 일은 필수불가결하여 감사원은 헌법 제99조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해 국가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서의 정확성과 적정성 등을 매년 국회에 제출 전 검사하는데, 이를 국가결산검사라고 한다(감사원, 2021). 그러나 행정의 적법성·합목적성·정당성 확보를 위해 이러한 내부적 행정통제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이원우, 2011) 국가재무제표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으며, 관련된 실증연구도 미흡한 실정이다(정아름·정도진, 2020). 그중에서도 국가재무제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회계오류(김봉환·한승엽, 2016)와 회계책임(accountability)의 이행·확보를 위한 보수적 회계선택(김인태 외, 2021)에 관한 공공 부문의 연구는 민간 부문과 비교했을 때 더욱 절실하다. 최근 민간기업의 회계오류로 인한 주가 하락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고(오형주·전범진, 2022), 공공기관의 회계오류를 방지하고, 회계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내외부 회계관리 강화 방안을 연구하려고 하는 만큼(최다현, 2022) 민간과 공공 부문 모두 회계오류는 화두로 인식된다.

본 연구는 다음 질문에 대해 탐구하려 한다: 국가재무제표의 회계오류가 보수적 회계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은 첫째, 중앙정부 회계오류와 보수적 회계선택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국가 회계품질을 실증적으로 분석·평가한다는 점에 있다. 2011년부터 발생한 국가회계 오류는 불규칙적으로 생기며 통제되지 않고 있다(이은경, 2020). 회계오류 발생은 회계품질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손상하기 때문에

오류 자체를 줄이는 일도 중요하지만, 오류 보고 시 중앙관서가 어떠한 대안을 통해 회계품질을 회복하고 회계책임을 달성하려고 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여러 대안 중에서도 회계보수주의는 주주와 경영인 사이의 대리인비용 감소, 정보비대칭 완화, 지배구조 개선 등에 도움을 주어 기업회계의 기본 원칙으로 작용한다. 회계주체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은 재무보고서가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알기에 비용이나 부채를 증가시키는 정보를 숨기고, 이익이나 자산을 증가시키는 정보는 자발적으로 재무보고서에 반영하려는 경향이 있다(김봉환, 2013a). 따라서 보수적 회계선택은 이러한 경향을 상쇄하여 회계주체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도록 하고, 정보비대칭성을 줄여준다(김봉환, 2013a). 정부회계 측면에서도 주인-대리인 모형(Principal-Agent Model)에 의해 국민의 대리인은 선출직인 국회의원과 대통령이고, 선출직의 대리인은 공무원인데(유민봉, 2021) 이들 사이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대리인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정부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지니고 있고, 책임성을 구현하는 것은 신뢰받는 정부가 되는 것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김윤권·윤두섭, 2011). 따라서 도덕적 해이, 기회주의 등의 대리인비용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회계책임을 달성하기 위해 오류 발생 후 회계보수주의 강화라는 회계정책 변화가 일어날지 알아보려 한다.

둘째, 국가 회계품질 평가의 방법론을 보완한다. 국가재무제표의 회계 오류에 관한 선행연구(김봉환·한승엽, 2016; 정아름·정도진, 2020; 이은경, 2020; 김봉환·전예진, 2022)에서 사용한 변수를 종합·수정하여 회계오류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회계보수주의와 어떤 관계를 띠고 있는지 알아보으로써 새로운 분석 틀을 제시한다. 더 나아가, 각 중앙관서는 분야, 예산, 인력 등에서 상이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로 인해 회계오류와 회계보수주의의 관계는 중앙관서의 특징과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변수의 조절효과를 알아본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가를 이루는 중앙관서의 회계오류가 보수적 회계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회계오류 발생 시 정부가 회계정보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

한 수단으로 보수주의를 강화하는지 판단하며, 중앙정부 회계품질 연구의 확장에 이바지한다.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이론적 논의

1. 국가회계와 국가재무제표

국가회계(national government accounting)란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자원의 변동을 화폐의 흐름으로 측정하고 기록·보고하는 일련의 과정이자 제도이다(허웅·윤성식, 2011). 정부는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조세수입 등을 기반으로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출 활동을 하는데, 이러한 정부 부문의 경제활동을 재정이라고 한다(국회예산정책처, 2022). 국가회계실체(national government accounting entity)는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국가의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경제적 실체로서(허웅·윤성식, 201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제5조에 따른 기금이 중앙관서별로 구분된 것이며(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중앙관서 단위와 국가 통합 단위도 포함한다(국가회계법 제13조). 이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의 회계를 다룰 예정이다.

중앙정부의 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 추경예산 기준 총수입 553.6조원, 총지출 624.3조원으로(국회예산정책처, 2022) 재정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반회계는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지출에 사용되고, 특별회계는 국가가 특정 사업 추진, 특정 자금 운용 등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다(국회예산정책처, 2022).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해야 할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되고, 조세수입이 아닌 출연금·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한다(국회예산정책처, 2022).

국가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는 [표 1]에 나타나 있다. 대표적인 차이점으로는 목적, 재무제표 체계, 거래 유형이 있다. 기업은 재화와 용역의 제공을 통해 이윤을 거두어들이는 교환거래 형태를 띠지만, 국가는 교환거래뿐만 아니라 조세수입과 지출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비교환거래 형태도 띈다(허웅·윤성식, 2011).

[표 1] 국가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

구분	국가회계	기업회계
목적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 → 프로그램원가 및 재정운영 결과 정보 제공	경영활동을 통한 이윤 추구 → 당기순이익 제공
재무제표 체계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주식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식
	재정운영표: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수익-비용)
	현금흐름정보는 필수보충정보로 제공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현금흐름정보는 재무제표로 제공 (현금흐름표)
거래 유형	교환거래, 비교환거래 모두 발생	교환거래
자산 정의 차이	경제적 효익 창출 외 공공서비스 잠재력도 고려	경제적 효익 창출 고려
국가회계의 특수자산	- 사회기반시설, 전비품: 재무제표 인식 - 유산자산: 재무제표 미인식	해당 없음
유가증권 평가	취득원가(또는 상각후원가) 원칙	공정가치 평가 원칙
차입원가 자본화	인정되지 않음 (전액 비용처리)	자본화 원칙
지분법 평가	해당 없음	지분법 평가

이연법인세	해당 없음	이연법인세 평가
기타 대여금	용자보조원가충당금 평가, 감가상각대체	해당 없음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2020)

국가회계의 결산 절차는 [표 2]에 요약되어 있다.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보고서(이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국가회계법 제13조 제1항), 이를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의 결산보고서(이하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국가회계법 제13조 제2항). 그 후 승인받은 결산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고, 약 1개월 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에 결산검사 결과를 통보한다. 감사원은 2011회계연도 이후 세입·세출 결산검사, 재무제표 검사 및 성과보고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감사원, 2021).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 검사에서는 잔액 일치 여부, 출납의 적정성 여부, 결산 계수의 정확성 여부 등을, 재무제표 검사에서는 계정과목의 적용 오류와 자산·부채 누락 등 회계처리 오류를, 성과보고서 검사에서는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측정방법 등 성과 요소의 적정성 및 성과달성도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한다(감사원, 2021). 그렇게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이를 심사 및 의결하며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면 국가회계 결산은 마무리된다.

[표 2] 국가회계 결산 과정

차 례	기 간	사 항	비 고
1	2월말	중앙관서: 기획재정부에 결산보고서 제출	국가재정법 제58조
2	4.10.	기획재정부: 감사원에 결산검사 의뢰	국가재정법

			제59조
3	5.20.	감사원: 기획재정부에 결산검사 결과 통보	국가재정법 제60조
4	5.31.	기획재정부: 국회에 국가결산보고서 제출	국가재정법 제61조
5	정기회 개회 전	국회: 결산 심의·의결 -상임위 심사, 예결위 종합심사(소위심사), 본 회의 의결	-
6	-	국회: 기획재정부에 시정요구사항 이송 및 처 리결과 보고	-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2020), 허웅·윤성식(2011)을 바탕으로 재구성

결산보고서는 결산 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구성된다(국가회계법 제14조). 결산 개요는 결산의 내용을 요약하여 예산 및 기금의 집행 결과, 재정의 운영 내용과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국가회계법 제15조 제1항). 세입세출결산은 세입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같은 구분에 따라 그 집행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해야 하고(국가회계법 제15조 제2항),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그에 대한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해야 한다(국가회계법 제15조 제4항).

마지막으로, 재무제표는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국가회계법 제15조 제3항),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및 주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부는 국가재무제표를 통해 국민들의 세금 등으로 공공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였는지 보고해야 한다(정도진 외, 2015). 재정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자산, 부채, 순자산 현황을 보여주는 보고서로 기업의 재무상태표와 유사하고, 재정운영표는 일정 기간의 수익, 비용 현황을 보여주는 보고서로 기업의 손익계산서와 유사하다. 순자산변동표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인 순자산의 변동 내역을 보여주는 보고서로 기업의 자본변동표와 대응되고, 주석은 중요한 회계정책과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명시한 것이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

가회계재정통계센터, 2020). 각 기관은 재무제표에 추가하여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 부속서류를 제출한다. 중앙관서는 각각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국가는 이들을 통합하여 국가 전체의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국가 재무제표와 중앙관서 재무제표는 큰 틀에서 거의 동일하지만, 재정운영표와 순자산변동표 구성에 차이가 있다. 국가의 재정운영표는 중앙관서별 재정운영순원가를 바로 표시하지만, 중앙관서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 등을 구분한다. 또한, 국가의 순자산변동표는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조정항목, 기말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중앙관서의 순자산변동표에는 ‘재원의 조달 및 이전’ 항목이 추가된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2020).

2. 회계오류

본 연구에서 회계오류는 재무제표의 오류로서 계산상의 실수, 회계기준의 잘못된 적용, 사실에 대한 잘못된 판단, 부정, 과실, 사실 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것인데(손성규 외, 2013) 재무제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오류와 감사원 결산검사 시 지적된 오류를 포함한다. 재무제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오류는 순자산변동표에 명시된 전기오류수정손익이며, 감사원 결산검사 시 지적된 오류는 재무제표 검사에서 발견된 회계처리의 오류이다.

회계오류는 회계품질 중 정확성과 신뢰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개념체계의 근본적 질적 특성 중 표현의 충실성을 평가하는 지표이다(김봉환·한승엽, 2016). 부적절한 회계처리로 오류가 발생한다면 일반적으로 회계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저하된다(오광욱·마희영, 2014). 또한, 회계(감사)품질의 측정 지표로 회계학에서 널리 활용되는 재량적 발생액(discretionary accruals)보다 회계오류가 회계품질과 더욱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지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송혁준 외,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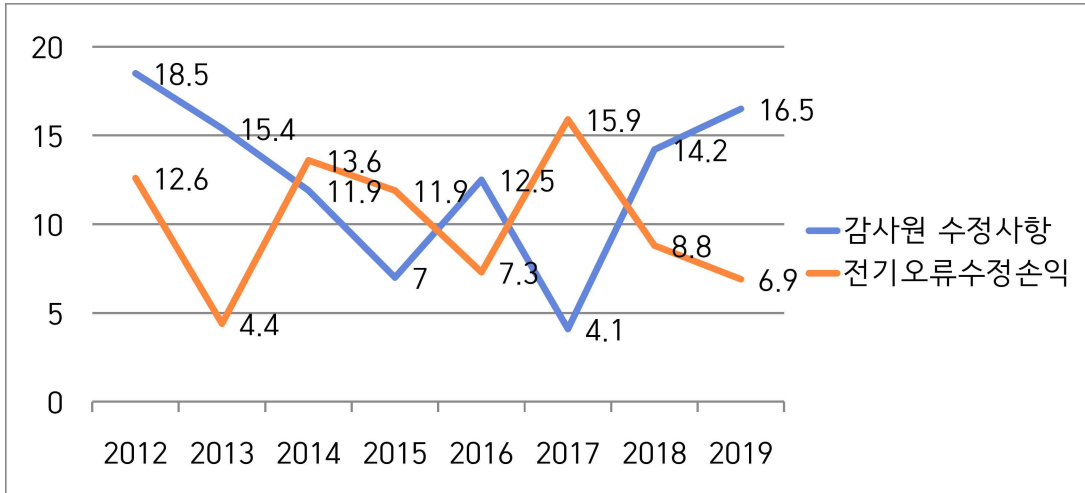
K-IFRS 개념체계에서 표현의 충실성이란 “완벽하게 충실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서술은 완전하고, 중립적이고, 오류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국가회계법 제1장 제1조에 의하면 해당 법의 목적은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제공하는 것”이다. 기업회계기준과 같이 독립된 개념체계에 회계정보가 갖추어야 할 질적 특성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가회계법과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목적적합성, 신뢰성, 이해가능성, 표현의 충실성 등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최연식 외, 2016). 또한, 국제공공회계기준제정위원회(The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이하 ‘IPSASB’)의 「공공부문 실체의 일반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역시 K-IFRS 개념체계와 마찬가지로 목적적합성과 표현의 충실성을 유용한 재무회계정보의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으로 정의한다(김봉환·한승엽, 2016). 따라서 국가재무제표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질적 특성을 확보해야 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회계오류를 활용한다.

[그림 1]에는 최초 재무제표 개시 이후 2012년부터의 국가재무제표 오류 금액 현황이 나타나 있다. 감사원 수정사항과 전기오류수정손익 모두 일정한 추이를 보이지 않는데, 다만 2017년 이후 감사원 수정사항은 증가하였고, 전기오류수정손익은 감소하였다. 8년 동안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은 81.4조원, 감사원 수정사항은 100.1조원으로 총 200조원에 육박한다. 이은경(2020)은 감사원 수정사항이 많이 발생한 부처는 전기오류수정손익도 많이 발생한다고 덧붙였고, 해당 부처로 국토교통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를 들었다.

[표 3]은 감사원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중앙관서별 오류의 누적 건수(2011회계연도~2020회계연도)를 나타낸다. 상위 5개 부처는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산림청, 문화체육관광부이다. 2020회계연도의 감사원 결산검사 지적 건수 합계는 82건으로 2011회계연도의 133건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며, 업무담당자의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과 관련된 오류도 감소하였다(기획재정부 외, 2021). 그러나 단순 회계처리 오류는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여(기획재정부 외, 2021) 회계처리에 신중함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국가재무제표의 오류 금액 추이 현황 (단위: 조원)



자료: 이은경(2020)을 바탕으로 재작성

[표 3] 중앙부처별 감사원 결산검사 지적 오류 건수(누적)

부처명	건수	부처명	건수	부처명	건수
국방부	83	문화재청	26	공정거래위원회	11
국토교통부	76	해양경찰청	24	여성가족부	10
기획재정부	72	산업통상자원부	20	식품의약품안전처	9
산림청	45	법무부	20	병무청	9
문화체육관광부	43	국가보훈처	20	조달청	6
해양수산부	41	농촌진흥청	19	통계청	6
환경부	4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8	국회	5
농림축산식품부	40	금융위원회	18	방송통신위원회	4
방위사업청	40	기상청	17	원자력안전위원회	3
교육부	39	관세청	15	인사혁신처	3
고용노동부	39	중소벤처기업부	15	소방청	3
보건복지부	34	국세청	15	법제처	2
경찰청	30	행정안전부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8	대법원	13		

자료: 기획재정부 외(2021)

현재 국가재무제표 회계오류와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오류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각 부처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일이 발생한다(김봉환·한승엽, 2016). 둘째, 회계 담당자들의 관련 업무 숙지가 부족하고, 교육이 미흡하다(이은경, 2020; 김봉환·전예진, 2022). 셋째, 감사원 결산검사의 경우, 오류 사항을 적발할 뿐 감사의견을 표명할 정도의 증거를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재무제표 적정성에 대한 책임성이 떨어질 수 있다(이은경, 2020). 그러므로 회계오류에 관한 명확한 분류 기준이 필요하고, 담당자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야 하고, 감사원 결산검사를 더욱 정교하게 시행해야 한다.

3. 보수적 회계선택(회계보수주의)

Basu(1997)는 회계보수주의(conservatism)를 수익이 좋은 소식(good news)보다 나쁜 소식(bad news)을 더 빨리 반영하는 것으로 정의했으며, Watts(2003)는 이익 인식과 손실 인식에 요구되는 검증 가능성(verifiability)의 차이로 정의했다. Wolk et al.(2013)은 회계보수주의에 관한 여러 정의를 종합하여 해당 개념이 ‘수익의 인식을 천천히 하거나 비용을 빠르게 인식하고, 자산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거나 부채의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법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Ruch & Taylor(2015)는 회계보수주의란 순자산의 회계적 가치가 경제적 가치에 비해 하향되는 회계정책 또는 경향을 의미한다고 했다. 회계를 통해 기업에 관한 정보가 공시되고, 신호가 전달되어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회계에 긍정적인 소식을 반영하거나 이익을 인식할 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확실한 경우에만 이루어지지만, 부정적인 소식이나 손실에 관해서는 불확실성과 미래의 위험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빠르게 반영 또는 인식하는 보수적 회계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Ruch & Taylor(2015)에 의하면 회계보수주의는 조건적 보수주의(conditional conservatism)와 무조건적 보수주의(unconditional

conservatism)로 구분할 수 있다. 조건적 보수주의는 부정적인 경제 소식이 긍정적인 소식보다 적시에 인식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두 가지 소식의 비대칭적 인식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반면에 무조건적 보수주의는 경제적 소식과 무관하게 순자산(net asset)을 지속적으로 빠르게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예시로는 가속화된 감가상각(accelerated depreciation methods), 광고비·연구개발비를 즉각 사용하는 것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한다.

회계보수주의는 기업회계에서 기본 원칙으로 작용하기에 지속적으로 논의된 개념이다. 정부회계에서도 재고자산의 경우,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으면 시가를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채택하기 때문에 회계보수주의가 국가회계기준에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암묵적인 원칙이 된다(김봉환, 2013b). 보수주의의 영향과 효과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긍정적 영향으로는 첫째,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대리인비용을 감소시켜 재무보고의 질을 높인다는 점이 있다(Ball et al., 2000). 여러 선행연구에 따르면 회계보수주의는 기업 지배구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데, 보수주의가 기업 감독·감시에 활용 가능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Ruch & Taylor, 2015). 이는 자산과 이익을 증가시키려는 경영자의 이익조정 동기와 기회주의적 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도 이어진다. 둘째, 이익보다 손실을 적시에 인식하여 채권자·채무자 사이의 계약이 효율적으로 이행되도록 한다(마희영, 2010). 셋째, 공시로 인한 부담이 미공시로 인한 부담보다 크기 마련인데 이때의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된다(백원선·이수로, 2004). 그러나 보수주의가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보수주의로 인해 순자산과 순이익이 과소계상되어 기업의 경영성과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이는 재무보고의 유용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백원선·이수로, 2004). 또한, 이익 지속성과 예측가능성 감소, 분석가의 예측 정확도 하락, 이익의 가치 연관성(value relevance) 하락 등의 문제점이 있다(Ruch & Taylor,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보수주의의 긍정적인 효과를 밝힌 연구결과가 훨씬 많기 때문에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회계품질을 높이는 데에 일

반적으로 보수주의가 기반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보수적 회계선택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수익의 품질(earnings quality)을 나타내는 변수였고, 보수적으로 처리된 수익의 질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Ball & Shivakumar, 2005; Ball & Shivakumar, 2006).

이러한 회계보수주의의 효과는 기업회계뿐만 아니라 정부회계에도 적용 가능하다. 주인-대리인 모형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지만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서 통제가 곤란하며, 공무원의 주인인 정치인은 여야로 나뉘어 공방을 벌이고, 국민의 시선도 이슈에만 집중되기 마련이기에 대리인에 대한 책임성 확보는 민간기업에 비해 힘들다(유민봉, 2021). 따라서 정부회계의 회계주체인 정부는 회계보수주의를 채택하여 대리인비용을 줄일 수 있고, 궁극적으로 회계책임(accountability)을 이행 및 확보할 수 있다(김인태 외, 2021). 정부회계기준위원회(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이하 'GASB')의 개념서 1호에 따르면 회계책임은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고, 자신이 한 것을 정당화할 의무”, 즉, “공적 자원 조달과 그것들을 사용한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해 정부가 시민에게 답을 할 것”을 의미한다(심재영, 2016). 그 의미는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정부의 ‘공공회계책임’ 달성 의무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에도 나타나 있다.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 민간·공공 부문 회계오류에 관한 선행연구

공공 부문 회계오류에 관한 선행연구는 실증분석보다 현황분석 및 정책제언 형태의 질적 분석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에 반하여 민간 부문 선행연구는 오류보고가 보수주의 정책에 미치는 영향(마희영, 2010), 오류수정 이후의 회계정보 신뢰성 변화(오명전·손성규, 2012), 기업 특성이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미치는 영향(신호영, 2003), 오류수정의 재무보고방법과 주식시장의 반응(윤승준, 2005) 등으로 다양한 주제와 형태의 양적 분석이 이루어졌다.

기업회계 분야에서 마희영(2010)은 기업의 오류보고가 회계보수주의를 강화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오류보고는 전기오류수정손익 보고 여부로, 보수주의는 발생액(accrual)과 영업현금흐름으로 측정하였고, 오류보고 이전과 이후 3년의 보수주의 정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오류보고 이후에 경제적 손실을 이익보다 빨리 반영한다는 것과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 및 오류금액이 큰 경우 보수적 회계처리가 증가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 연구는 기업이 오류보고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회계보수주의를 강화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오명전·손성규(2012)는 기업의 전기오류수정손익 보고가 후속 기간의 회계정보 신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신뢰성은 시장반응, 즉, 분기별 순이익에 대한 이익반응계수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오류수정으로 인한 신뢰성 상실은 후속 기간의 정보 할인을 초래하기에 회계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여야 한다는 점과 그럼에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신뢰성이 회복되기 때문에 이익조정을 했더라도 신속히 오류수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주었다. 이처럼 회계학에서는 회계오류를 대부분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측정하였다.

정부회계 분야에서 김봉환·한승엽(2016)은 국가 재무회계정보의 품질 중 정확성 평가에 대한 지표로 회계오류를 선정하여 2011~2014년 동안의 오류 추세를 분석하였다. 회계오류는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 중대하지 않은 전기오류수정손익과 기타 순자산 조정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평가대상 기간 중 국가재무제표의 정확성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금액적 중요성이 큰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처가 다수 관측되어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았다. 이 연구는 국가재무제표의 품질 향상을 위해 오류에 관한 정확한 회계처리기준 마련, 오류 표기 방식 개선 등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정아름·정도진(2020)은 감사원 결산검사에 따른 국가재무제표의 오류 유형을 분석하고 결산검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는 2011회계연도부터 2018회계연도까지 감사원 결산검사에서 발견된 960건의 오류들을 전수 조사한 최초의 연구이다. 연구결과 및 함의로 감사원의 결산검사가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 등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점, 결산검사의 체계적 수행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점, 오류 지적에 대한 유의한 처분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연구도 몇 차례 이루어졌다. 이은경(2020)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의 중앙관서 회계오류 총액에 대한 현황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9년간 오류액은 총 200.1조원이었고, 불규칙적으로 발생하여 국가재무제표의 오류가 통제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오류총액 상위 4개 부처인 국토교통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의 오류가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을 중심으로 발생하기에 종합적인 국유재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저자는 주기적으로 국유재산 실태를 조사하여 오류를 사전에 발견하고 수정해야 하며, 감사원 결산검사의 정교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세워야 하며, 재무제표 담당자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봉환·전예진(2022)은 국가결산 참여자 관점에서 자산 관련 회계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했다. 참여자별 표적집단면접(FGI)을 실시하여 오류 발생 원인으로 회계법·규정의 미비, 회계기준의 미비, 회계

처리 확인 절차 체계 부족 등을 알아냈다. 이 연구는 피감사인과 감사인의 인터뷰를 토대로 실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한 최초의 연구이며, 자산 관련 회계오류의 발생 원인 유형에 맞는 맞춤형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2. 민간·공공 부문 회계보수주의에 관한 선행연구

민간 부문 회계학에서는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회계보수주의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보수주의가 독립변수로 활용되기도 하고, 종속변수로서 어떠한 요소가 보수주의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되기도 한다. 국제회계기준이 보수주의 회계에 미친 영향(강민정 외, 2012), 정보와 회계보수주의의 관계(LaFond & Watts, 2008; Garcia Lara et al., 2014), 보수주의와 발생액 사이의 관계(김정옥·배길수, 2009), 기업지배구조와 회계보수주의 관련성(Garcia Lara et al., 2009; 김진섭, 2015) 등 회계학에서는 회계보수주의에 관한 다양한 실증연구를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정부회계에서는 보수주의에 관한 논의가 충분치 않다.

강민정 외(2012)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이 보수주의 회계 관행에 미친 영향과 이에 대한 자본시장 투자자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저자는 IFRS의 주요 특징인 공정가치 측정이 시행됨에 따라 불확실성 감소 및 회계투명성 개선 측면에서 보수주의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분석 결과, IFRS 도입 후 회계보수주의는 증가했으며, 보수주의에 대해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이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을 밝혀냈다.

LaFond & Watts(2008)은 기업 내부자와 외부자(투자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이 재무제표의 보수주의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정보 비대칭 정도의 변화는 보수주의 정도의 변화를 유발한다고 가정하였고,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이를 입증하였다. 그에 따라 회계보수주의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가치 하락을 완화하는 평형 반응(equilibrium response)이라고 덧붙였다. Garcia Lara et al.(2014)은 회계보수주의가 기업의 정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LaFond & Watts(2008)의 분석 결과를 보

완하였다. 보수주의 수준이 증가하면 다음 연도의 정보 비대칭이 감소하고, 분석가의 예측 정확도가 향상되는 등 기업의 정보 환경이 개선된다는 것을 알아냈다.

기업회계에서는 보수주의의 측정치로 주가와 순자산의 크기 비교, 발생액과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관계 등을 이용했다. 그러나 기업회계와 정부회계의 차이로 인해 해당 측정치를 정부회계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김봉환(2013b)은 회계보수주의의 대리변수로 미수채권 대손충당금 비율을 활용하는 연구를 제시했다. 이 연구는 39개 중앙관서의 2010, 2011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단기미수채권 대손충당금 비율이 부처의 유형에 따라 다른지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프로그램 순원가가 높을수록, 정부를 대상으로 할수록, 경제부처일수록 높은 대손충당비율을 보였고, 회계보수주의가 정보 제공자와 이용자의 비대칭성을 줄인다는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회계학의 기본 원칙인 보수주의가 정부회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주었다.

그 이후 정부회계에서도 회계보수주의에 관한 연구가 등장했으나 여전히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연구는 대손충당금 설정만을 회계보수주의의 측정치로 활용하였다. 정성호·최수영(2017)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비율이 대손충당금 설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비율이 증가하여 재정건전성이 악화하면 현금유출이 수반되지 않는 비용을 적게 설정하고, 동시에 자산이 차감되는 대손충당금을 적게 설정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려는 유인이 있다. 혹은 비용을 빨리 인식하고 수익은 엄격하게 인식하는 회계보수주의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설정할 수도 있다. 분석결과,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미수세금 대손충당금 및 미수세금·세외수입 대손충당금뿐만 아니라 대손충당금 환입에 음(-)의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는 회계보수주의를 중심으로 다루지는 않았으나 부채비율과 대손충당금 설정의 관계를 밝혀낸 의의가 있다.

김봉환·전예진(2021)은 2014~2016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회계보수주의와 회계정보의 표현충실성을 통해 회계품질을 측정하고 검토인의 특성이

회계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회계보수주의의 대리 변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미수세금 대손충당금 비율이고, 표현충실성의 대리변수는 재무제표 상 중대한 오류와 중대하지 않은 오류였다. 이 연구는 회계정보 특성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회계품질 제고를 위한 분석을 했다는 점과 공공 부문에서 활발히 진행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검토인에 관한 실증분석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인태 외(2021)는 2009~2018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책임성이 보수적 회계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제도적 책임 과정상 정보단계에서의 성과정보 제공은 청렴도 결과로, 보수적 회계선택은 미수세금 대손충당비율과 미수세외수입금 대손충당비율로 측정하였다. 대손충당금 설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적 회계선택인데 설정률을 높일수록 보수적 회계선택으로 인식된다. 분석 결과, 미수세금은 정보공유가 원활할수록 성과정보의 제공이 보수적 회계선택에 미치는 정(+)의 영향을 약화하였으나 미수세외수입금은 정보공유가 활발해질수록 성과정보의 제공이 보수적 회계선택에 미치는 부(-)의 영향을 약화하였다. 이 연구는 공공 부문의 제도적 책임과 회계책임에 관한 문헌의 확장에 일조했다.

제 3 장 연구 설계

제 1 절 연구가설 설정

본 연구는 다음 질문에 대해 탐구하려 한다: 중앙관서의 회계오류가 보수적 회계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회계오류 중 전기오류수정 손익은 과거 공시된 재무제표에 회계기준을 위반한 내용이 있다는 것으로 재무보고의 실패로 여겨지며(Romanus et al., 2008) 외부정보이용자들은 이를 통해 재무보고의 질이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마희영, 2010). 감사원 지적 오류에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연례 지적사례가 10년간 평균적으로 전체 사례의 80% 이상을 차지하는데(감사원, 2021) 이는 재무제표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불안감과 불신을 야기한다(정아름·정도진, 2020). 보수적 회계선택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수익의 품질(earnings quality)의 대리변수로 활용되었으며, 보수적으로 처리된 수익의 질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았다(Ball & Shivakumar, 2005; Ball & Shivakumar, 2006).

회계오류가 보수적 회계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우선 기업회계 측면에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회계정보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신뢰성이 손상될 것이고, 정보이용자들이 재무보고의 질을 낮게 평가하여 오류를 보고한 기업은 손상된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재무보고의 질을 높이려 하고, 이는 보수적인 회계처리의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마희영, 2010). 회계보수주의는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고, 대리인비용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반면에 회계수치를 통해 경영자의 성과평가 등이 이루어지기에 재무분석가의 예측치나 투자자들의 기대에 경영성과를 맞추려는 유인이 있어 오류를 보고했더라도 보수주의를 강화하지 않을 수 있다(Moore & Pfeiffer, 2004).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보수주의에 있어 기업의 최고경영자와 유사한 의사결정 함수를 가진다(김봉환, 2013b). 그에 따라 민간기업이 오류보고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회계보수주의를 강화한다는 마희영(2010)의 연구결과가 공공 부문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각 관서는 재무제표에 회계오류를 보고한 경우, 감사원, 국회, 시민단체, 일반 국민 등 외부로부터의 정보공개요구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김봉환, 2013b) 비난의 여지를 줄이고, 재무보고의 신뢰성과 정확성 하락을 방지하고자 회계보수주의를 강화할 유인이 있다. 반대 입장으로는 보수적 회계선택이 중앙관서의 재정운영결과를 악화하여 중앙관서장은 기업에 비해 자산 과다계상이나 비용 과소계상으로 인한 소송 또는 추가적 보상의 가능성이 적더라도 회계오류와 그에 따른 재무보고 신뢰성, 정확성 저하로 정치적 압력의 영향을 받거나 임기 연장 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봉환, 2013b).

중앙관서의 회계오류가 보수적 회계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핵심은 오류로 인한 회계정보의 신뢰성 저하와 그것을 회복하려는 정부의 책임성에 있다. 국가회계법과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면 국가의 회계처리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회계오류가 발생하면 재무보고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정보이용자인 국민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져 국가회계의 품질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에 따라 국가는 회계보수주의를 강화하여 수익의 질을 높임으로써 회계오류의 발생에 대응할 유인이 생기며, 그 바탕으로는 정부의 행정책임과 그 일종으로 볼 수 있는 회계책임이 있다. 행정책임은 정치인과 관료들이 그들의 권력과 재량으로 이뤄낸 행동 및 그 근거와 성과를 설명하고, 정당성을 주장하며, 평가를 받을 의무이다(엄석진, 2009). 회계책임 또한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고, 정당화할 의무를 뜻하는데 다른 말로는 공적 자원 조달과 그것들을 사용한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해 정부가 시민에게 답을 하는 것이다(심재영, 2016). 이는 기업보다 정부에서 더 중요하며, 주인-대리인 관계를 바탕으로 한다(심

재영, 2016). 회계책임에는 목적적합하고 적시성 있는 정보가 매우 중요한데(Cameron, 2004), 그 정보의 요건으로 투명성과 정확성이 충족되어야 한다(심재영, 2016). 그러나 회계오류가 발생하면 회계정보의 정확성과 표현충실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정부에게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고 정당화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때 정보의 유형, 공시 형식, 공시 시점 등에 따라 정보의 유용성이 결정되는데 정보의 유통은 보통 비대칭적이다(심재영, 2016). 따라서 정보비대칭을 줄이면서 회계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 중 1가지가 보수적 회계선택이다. 정부의 이러한 ‘공공회계책임’ 달성 의무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도 명시되어 있다. 즉, 정부는 회계오류로 인해 정확성과 신뢰성이 손상된 회계품질에 대해 대리인비용을 감소시키고 책임성을 실현하고자 다음 해의 회계처리를 더욱 보수적으로 수행하여 회계품질을 회복할 것으로 예측했다.

가설 1. 중앙관서의 회계오류가 많을수록 보수적 회계선택이 강화될 것이다.

가설 1-1. 중앙관서가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보고할 경우, 보수적 회계선택이 강화될 것이다.

가설 1-2. 중앙관서의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 금액이 높을수록 보수적 회계선택이 강화될 것이다.

가설 1-3. 중앙관서의 프로그램총원가 대비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 금액의 비율이 높을수록 보수적 회계선택이 강화될 것이다.

가설 1-4. 중앙관서의 감사원 결산검사 시 지적된 오류 건수가 많을수록 보수적 회계선택이 강화될 것이다.

다음으로, 중앙관서의 유형과 특징에 따라 회계오류와 보수적 회계선택의 관계가 변화할 것으로 추정했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는 “미수채권, 장기대여금 또는 단기대여금은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평가한다.”이고, 국가회계편람 계정과목 해설서에는 “대손충당금은 기말 결산시점에

기말 채권잔액 중 기간경과분석, 거래처별 신용 및 재무상태분석, 과거경험율을 토대로 대손예상액을 추산하여 대손충당금 잔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기말 채권잔액에 대한 대손예상액을 추정 시에는 연령분석법, 채권잔액비례법, 대손실적률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이외에도 기타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은 각 중앙관서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각 부처 특징의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보수주의 계정과목의 경우, 보수적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의 문제는 기관의 순이익, 순자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 경영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백원선·이수로, 2004) 기관의 특징에 의해 계정과목 금액이 달라질 확률이 존재한다.

중앙관서의 유형으로는 첫째,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부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처보다 국민과 접촉할 기회가 적고,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이해도가 더 낮아 정부와 국민 사이의 정보비대칭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것이다(김봉환, 2013b). 따라서 비대칭적 회계정보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이 더 높아 그에 대응해야 한다(김봉환, 2013b). 정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부처의 주요 고객이 정부부처와 행정기관이고, 주로 국가 운영과 국가 자원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함을 의미한다(김기환, 2005).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주요 고객이 일반 시민 혹은 기업이며, 국민을 위한 서비스의 생산과 규제 기능을 수행함을 의미한다(김기환, 2005). 둘째, 경제부처는 비경제부처보다 경제·경영 관련 인력의 비중이 높고, 국가회계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높아 대손충당금 설정 등에 관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정도가 더 크다(김봉환, 2013b). 이러한 근거로 해당 부처는 회계오류 발생 후 더욱 보수적으로 회계처리를 할 확률이 높고, 부처의 특징이 조절변수로서 회계오류가 보수적 회계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가설 2-1.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중앙관서일 경우, 회계오류가 보수적

회계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강해질 것이다.

가설 2-2. 경제부처일 경우, 회계오류가 보수적 회계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강해질 것이다.

제 2 절 연구방법

1. 표본 선정, 자료와 연구방법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국가를 이루는 43개의 중앙관서이며, 분석기간은 2011회계연도부터 2020회계연도까지다. 다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모두 결산 데이터이고, 오류를 보고한 당해연도보다 다음 연도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어서(마희영, 2010; 오명전·손성규, 2012) 종속변수인 보수적 회계선택은 2012회계연도부터 2021회계연도까지의 리드(lead) 변수이다.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상 정부기구도에 의하면 총 60개의 부처가 있는데 그중 데이터가 부재하거나 생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분석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제외하였다. 명칭이 변경되거나 통·폐합된 부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 확인 후 분석을 진행했다. 교육부는 과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3년 개편되었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일부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후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편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과거 농림수산식품부로 수산어업 부문의 업무까지 수행하다가 2013년 이 부문이 해양수산부로 이관되면서 변경된 명칭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과거 지식경제부에서 2013년 개편되어 외교부로부터 통상 업무를 넘겨받았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과거 국토해양부였으나 2013년에 해양 업무가 해양수산부에 이관되고, 국토해양부가 국토교통부로 명칭을 변경하며 탄생하였다. 행정안전부는 2013년 3월 안전행정부로 변경된 후 2014년 11월~2017년 행정자치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다 2017년 7월 행정안전부로 자리잡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6년까지 중소기업청이었다가 2017년 시행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승격되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3년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승격되었다. 외교부는 종속변수 데이터가 부재한 연도가 많고, 조절변수 중 첫 번째 부처 유형에 대한 분류가 모

호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인사혁신처는 2014년에 출범하였고, 소방청은 2004~2014년 소방방재청, 2015~2016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를 거쳐 2017년에 출범하였다. 해양경찰청 역시 2015~2016년 동안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소속을 달리하였다.

[표 4] 분석대상 중앙관서 명단

부처	개수	부처명
원	1	감사원
부	17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처	4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청	14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위원회	4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기타	2	국회, 대법원
합계	42	

이 연구는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과 감사원 국가결산검사보고서에서 수집한 국가회계 데이터를 STATA 16.0으로 분석하여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했다. 여러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과 조절변수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2. 변수 설정

1)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회계오류는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 금액, 비율, 보고 여부, 감사원 결산검사 시 지적된 오류 건수로 측정한다. 첫 번

째 독립변수인 전기오류수정손익이란 회계의 기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전년도의 회계상 오류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전기 이전의 재무제표에 대한 오류의 수정사항에 속하는 손익항목이다(국세청 용어사전). 오류 발생의 원인으로는 계산상의 실수, 회계기준의 잘못된 적용, 사실판단 오류, 부정, 과실, 누락 등이 있다(손성규 외, 2013). 그중 중대한 것은 재무제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로서(신현걸 외, 2022)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고, 중대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실무자가 범하는 오류이다. 중대한 오류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산보고서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자산, 부채 등의 과소계상 또는 과대계상에 관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은 금액, 비율, 보고 여부의 3가지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해당 오류는 각 부처의 순자산변동표에 나타나 있는데, 금액은 오류액의 절댓값이고, 비율은 김봉환·한승엽(2016)의 연구를 참고하여 오류액 절댓값을 프로그램총원가로 나눈 값으로 설정하였으며, 보고 여부는 보고하였을 경우 1,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0인 더미변수이다.

두 번째 독립변수는 감사원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오류 건수로서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재정정보원이 매년 발간하는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의 ‘중앙관서별 감사원 지적사례’에서 확인했다. 결산검사는 감사원이 시행하는 세입·세출 검사, 재무제표 검사, 성과보고서 검사 중 재무제표 검사를 의미한다. 재무제표 검사는 국가회계기준에 바탕을 두어 중요성 원칙에 따라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정이며, 중요성 원칙은 금액적인 것과 더불어 재무제표 이용자를 오도할 수 있는 질적 중요성을 말한다(정아름·정도진, 2020). 중앙관서별 감사원 유형에 따른 지적사례 누적 수를 보면 이러한 사례들이 크게 자산 평가, 자산 취득, 부채 누락 및 중복 계상, 수익·비용 인식 등과 관련된 오류임을 유추할 수 있다.

2) 종속변수

종속변수인 보수적 회계선택은 첫째, 단기미수채권 대손충당금 비율로

측정한다.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한 계정과목 중 단기미수채권이 가장 흔하게 사용되어서 해당 과목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단기미수채권이란 정부 고유의 행정활동, 재화, 용역제공활동 등의 거래에 의하여 장래에 일정한 현금을 수취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경우 등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재정상태표일 현재 회수기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이다(허웅·윤성식, 2011). 대손충당금이란 미수채권, 대여금 등과 관련하여 채권의 회수 가능성 평가액과 채권의 액면금액 차이를 의미하며, 대손의 위험 또는 채권의 회수불가능한 부분을 금전적인 액수로 환산한 것이다(허웅·윤성식, 2011). 즉, 미래의 손실을 예측하고 현재에 그 비용을 반영하는 보수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김봉환, 2013b), 대손충당금을 실제 손실 예상액보다 많게 설정하면 당기 비용이 증가하고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가 악화하기 때문에(정성호·최수영, 2017) 대손충당금 비율은 보수적 회계선택이 적용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이 오래될수록, 거래처의 신용이 낮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과거에 대손률이 높을수록 대손충당금 잔액을 높게 결정하는 것이 회계를 보수적으로 처리한 것이지만 중앙관서가 보유한 정보나 내부 지침 등 다른 요소에 의해 영향 받을 여지가 크다(김봉환, 2013b).

둘째, 보수주의 관련 계정과목 금액의 합을 종속변수의 측정치로 설정하였다. 해당 계정과목 금액의 합이 클수록 현재 시점의 순자산 또는 순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회계선택이 보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보수적인 회계처리가 가능한 계정으로서는 재고자산평가손실, 감가상각비, 광고선전비, 충당부채전입액, 연구개발비, 대손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자산의 감액손실이 있는데(마희영, 2010), 이중 국가재무제표에서 확인 불가능한 계정인 무형자산상각비, 재고자산평가손실, 충당부채전입액은 제외하였고, 광고선전비는 기업회계에서는 자산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정부회계에서는 비용으로 계상되어(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제외하였다. 감가상각비¹⁾, 연구개발비²⁾ 등은 순자산과 순이익에 점진적인 영

1)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되는 설비의 원가에 대해 사용기간 등에 의한 물리적, 경제적 가치하락의 감소분을 감가상각이라 하고, 감가상각비란 감가상각

향을 미치는 비일회성(lagged) 보수주의 회계처리 항목으로 손익 인식과 관련이 있다(백원선·이수로, 2004). 연구개발비의 경우, 6가지의 요건³⁾을 모두 충족해야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백원선·이수로, 2004) 자산 대신 재정운영표에 비용으로 계상된, 즉 보수적으로 회계처리된 항목이다. 자산감액손실⁴⁾, 대손상각비⁵⁾ 등은 순자산과 순이익에 즉각 영향을 미치는 일회성(biased) 보수주의 회계처리 항목으로 자산 평가와 관련이 있다(백원선·이수로, 2004). 이러한 비용 항목이 많이 계상될수록 미래의 불확실한 거래 수익에 대한 비용을 현재 시점에 가속 인식한 것이기에(백원선·이수로, 2004) 보수적 회계선택을 한 것으로 해석한다.

3) 통제변수

통제변수로는 우선 자산, 부채비율, 관리운영비가 있다. 자산은 각 연도 재정상태표에 명시되어 있는 자산 금액의 합계, 부채비율은 재정상태

된 금액이나 비율로 나온 금액(열린재정 재정용어사전)

2)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비용으로 시험연구비, 시험연구재료비, 연구개발용역비가 있다(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3) ①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음 ②자산 완성 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의도가 있음 ③완성된 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할 수 있음 ④자산이 어떻게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한 것인지 보여줄 수 있음 ⑤자산 개발을 완료하고 판매 또는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음 ⑥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4) 자산의 물리적인 손상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5) 미수채권, 대여금 등 자산계정의 전기 대손추산액과 당기에 계산된 대손추산액과의 차이를 조정하고자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때 사용하는 비용 계정과목(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표상 부채 합계를 자산 합계로 나눈 값이다. 관리운영비는 재정운영표에서 가져온 변수로서 프로그램 수행에 직접 사용되지는 않으나 기관의 기본적인 기능 및 특정 사업의 행정 운영과 관련한 인건비와 경비를 의미한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2020). 이는 기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자산과 관리운영비(김봉환, 2013b) 및 차입 자본 이용(leverage)에 관해 파악할 수 있는 부채비율이 회계보수주의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Khan & Watts, 2007; 김인태 외, 2021) 채택된 변수이다.

또한, 회계보수주의 수준은 회계를 보고하는 기관의 전반적인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연구에 따라(김봉환, 2013b) 각 중앙관서의 보수주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단기대여금 대손충당금 비율, 장기대여금 대손충당금 비율, 장기미수채권 대손충당금 비율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그리고 2011회계연도부터 2020회계연도까지의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는 연구의 특성상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분석 시 연도 더미변수를 포함하였다.

4) 조절변수

조절변수는 김봉환(2013b)의 연구를 참고하여 설정하였다. 이들은 더미 변수로서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부처일 경우 1,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처일 경우 0이며, 경제부처일 경우 1, 비경제부처일 경우 0이다. 첫째, 정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부처의 주요 고객이 정부부처와 행정기관이고, 주로 국가 운영과 국가 자원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함을 의미한다(김기환, 2005).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주요 고객이 일반 시민 혹은 기업이며, 국민을 위한 서비스의 생산과 규제 기능을 수행함을 의미한다(김기환, 2005). 그러나 부처 유형 분류 시 한 기관이 어느 한 쪽만을 고객으로 삼고 있다고 단언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항목 간 완전히 배타적이지는 못하다(김기환, 2005). 따라서 ‘주요’ 고객이 누군지에 초점을 두었다. 행정안전부의 중앙행정기관 2016년 기능분류체계 현

황에서 목적별 분류체계의 임무, 전략목표 또는 성과목표가 국민 중심적일 경우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처로 분류하고, 현황에 존재하지 않는 기관이거나 분류가 모호한 경우 김기환(2005)과 김봉환(2013b)의 연구 및 각 부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였다. 두 번째 변수의 경우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제5조(구성원 등)에 명시된 부처를 경제부처로 지정한 뒤 나머지는 비경제부처로 간주하였다. 조절변수 분류 결과는 [표 5]와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변수의 측정과 출처에 관한 내용은 [표 7]에 나타나 있다.

[표 5] 정부 대상 부처와 국민 대상 부처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부처(1)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처(0)
부처	감사원, 국회, 국방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통일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통계청, 조달청, 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병무청, 산림청, 국세청, 관세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문화재청, 소방청,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대법원
개수	12	30

[표 6]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

	경제부처(1)	비경제부처(0)
부처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원, 국방부, 법무부, 통일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

	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청, 통계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문화재청, 소방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회, 대법원
개수	16	26

[표 7] 변수의 측정 및 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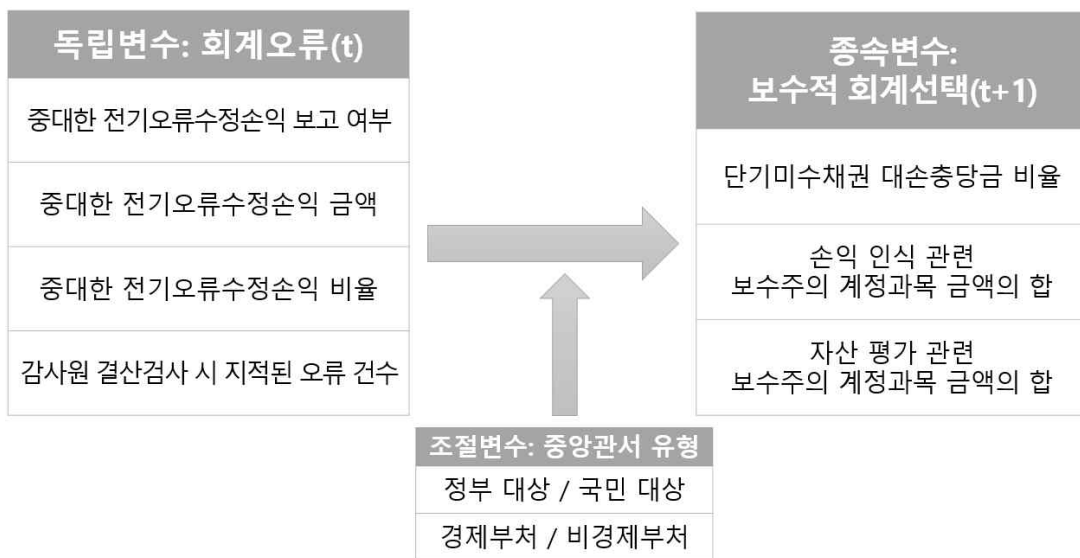
구분	변수명	측정내용	측정단위	출처
종속변수	단기미수채권 대손충당금 비율	=단기미수채권 대손충당금/단기미수 채권x100	%	열린재정 (재정상태표)
	손익 인식 관련 보수주의 계정과목	=감가상각비+연구개발비	억원	백원선·이수로 (2004), 마희영 (2010)
	자산 평가 관련 보수주의 계정과목	=대손상각비+자산감 액손실	억원	백원선·이수로 (2004), 마희영 (2010)
독립변수	중대한 전기오류수정 손익 금액 (log)	순자산변동표상 '전기오류수정손익'으 로 계상된 금액의 절댓값	억원	열린재정
	중대한 전기오류수정 손익 비율	=전기오류수정손익/ 프로그램총원가x100	%	열린재정 (순자산변동표, 재정운영표)
	중대한 전기오류수정 손익 보고 여부	보고함=1, 보고하지 않음=0		열린재정 (순자산변동표)
	감사원 결산검사 시	중앙관서별 감사원 지적사례	건	2021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

	지적된 오류 건수			
통제변수	자산(log)	재정상태표상 자산 총액	조원	열린재정 (재정상태표)
	부채비율	=부채 총액/자산 총액x100	%	열린재정
	관리운영비(log)	재정운영표상 '관리운영비'로 계상된 금액	억원	열린재정
	단기대여금 대손충당금 비율	=단기대여금 대손충당금/단기대여 금x100	%	열린재정 (재정상태표)
	장기대여금 대손충당금 비율	=장기대여금 대손충당금/장기대여 금x100	%	열린재정 (재정상태표)
	장기미수채권 대손충당금 비율	=장기미수채권 대손충당금/장기미수 채권x100	%	열린재정 (재정상태표)
	(연도더미)	2011년 기준 더미		
조절변수	부처 유형 1	정부 대상 부처=1, 국민 대상 부처=0		행정안전부- 중앙행정기관 기능분류체계 현황(2016), 김기환(2005), 김봉환(2013), 부처 홈페이지
	부처 유형 2	경제부처=1, 비경제부처=0		「경제관계장 관회의 규정」

3. 분석 틀과 연구모형

본 연구는 국가재무제표의 회계오류가 보수적 회계선택에 미치는 영향과 중앙관서의 유형이 두 변수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연구의 분석 틀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의 분석 틀



가설 1을 검정하기 위한 회귀분석의 연구모형은 연도더미가 포함된 합동 OLS 모형으로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인 회계오류 중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은 보고 여부, 금액, 비율인 3가지로 구분하여 각각 분석한다. 또한,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재무제표에 명시되는 한편 감사원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오류는 결산검사보고서에 기록되는 형식으로, 두 변수의 성격이 다소 상이한 것을 고려하여 별도로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연구모형 1>

$$(\text{보수적 회계선택}) = \beta_0 + \beta_1 \times (\text{회계오류}) + \beta_2 \times (\text{통제변수}) + \epsilon$$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의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중앙관서 유형을 조절변수로 넣어 회계오류가 보수적 회계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분석하여 연구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한다. 또한, 독립변수가 4개인 관계로 독립변수 각각에 대하여 위계적 회귀모형을 적용하여 설명량(R^2)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조절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상호작용항을 예측변수로 추가했을 때 증가하는 설명량, 즉, R^2 으로 검증하기 때문이다(조영일 외, 2015).

<연구모형 2>

$$1) (\text{보수적 회계선택}) = \beta_0 + \beta_1 \times (\text{회계오류}) + \beta_2 \times (\text{통제변수}) + \beta_3 \times (\text{중앙관서 유형}) + \epsilon$$

$$2) (\text{보수적 회계선택}) = \beta_0 + \beta_1 \times (\text{회계오류}) + \beta_2 \times (\text{중앙관서 유형}) + \beta_3 \times (\text{회계오류}) \times (\text{중앙관서 유형}) + \beta_4 \times (\text{통제변수}) + \epsilon$$

제 4 장 실증분석 결과

제 1 절 기술통계량

[표 8]은 연구대상인 중앙관서의 연도별 회계오류 합계를 나타낸 것이다. 국가에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가 2011년 처음 도입되어 이후 약 3년 동안은 오류가 비교적 많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부터는 이전 시기와 대비하여 대체로 감소하는 양상을 띠었다. 그러나 감사원 결산검사 시 지적된 오류는 매년 70~100건 이상이기에 회계오류 발생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표 8] 중앙관서의 회계오류 합계 변화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중대한 전기오류 수정손익 보고 여부	11	5	1	0	1	0	0	0	0	1
중대한 전기오류 수정손익 금액 (조원)	10.41	4.12	0.09	0	4.98	0	0	0	0	0.002
감사원 결산검사 시 지적된 오류 건수	113	112	107	113	107	89	91	77	84	76

[표 10]을 통해 모든 변수의 기술통계량을 확인할 수 있다. 종속변수인 미수채권 대손충당금 비율의 평균은 약 26%이고, 모든 종속변수는 기관 별로 큰 편차를 보인다. 즉, 보수적 회계선택은 기관에 따라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독립변수 중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보고한 기관은 10년간 총 19개에 불과했다. 이에 관한 금액과 비율 또한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아래 [표 9]를 통해 중대한 전기오류수정

손익을 보고한 기관명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중대한 오류의 내용은 각 기관 결산보고서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 명시되어 있는데 다양한 자산, 부채 등의 과소계상 또는 과대계상에 관한 것이다.

[표 9]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 보고 기관

회계연도	부처명	전기오류수정손익 금액
2011	교육부	-546,467,061,984
	국토교통부	-810,069,688,088
	기획재정부	-443,982,795,370
	농림축산식품부	30,630,852,831
	문화체육관광부	103,907,343,155
	방위사업청	-7,966,536,131,440
	법무부	1,169,823,054
	산업통상자원부	292,223,306,771
	여성가족부	151,892,011,647
	해양경찰청	385,778,59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61,514,332,956
2012	고용노동부	-297,595,611,398
	금융위원회	48,726,437,614
	문화체육관광부	103,907,343,155
	방위사업청	3,659,765,213,816
	법제처	10,355,073,182
201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89,911,868,451
2015	국토교통부	4,976,114,082,945
2020	보건복지부	2,216,838,300

[표 10] 기술통계량

변수명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중위값	최댓값
미수채권 대손충당금 비율(%)	420	25.88	30.71	0	11.66	100
손익 인식 관련 보수주의	420	548.89	2,731.03	0	121.02	32,026.13

계정과목 (억원)						
자산 평가 관련 보수주의 계정과목 (억원)	420	454.67	1,454.38	0	2.24	18,830.13
중대한 전기오류수정 손익 보고 여부(dummy)	420	0.05	0.21	0	0	1
중대한 전기오류수정 손익 금액 (억원)	420	466.60	4,936.17	0	0	79,665.36
중대한 전기오류수정 손익 비율(%)	420	2.73	25.55	0	0	386.58
감사원 결산검사 시 지적된 오류 건수(건)	420	2.31	2.34	0	2	12
자산(조원)	420	50.53	136.11	0	5.27	837.98
부채비율(%)	420	117.25	569.53	0	3.37	4,454.61
관리운영비 (억원)	420	5,516.29	14,223.97	0	1,802.38	110,984.5
단기대여금 대손충당금 비율(%)	420	3.77	15.52	0	0	100
장기대여금 대손충당금 비율(%)	420	3.88	12.81	0	0	97.1
장기미수채권 대손충당금 비율(%)	420	5.66	21.22	0	0	100
부처 유형 1	420	0.29	0.45	0	0	1

(dummy)						
부채 유형 2 (dummy)	420	0.36	0.48	0	0	1

[표 11]은 기획재정부의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에 명시된 각 중앙관서의 유형별 회계오류의 합계를 나타낸다.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은 2016년부터 작성되었고, 누적 건수를 통해 연도별·유형별 오류를 파악했기 때문에 아래 표의 기간은 2016~2020회계연도에 해당한다. 유형1은 자산재평가, 대손 등 자산 평가 관련 오류, 유형2는 자산 누락 및 중복 계상 등의 오류, 유형3은 건설중인자산 대체, 자본적 지출 등 자산 취득 관련 오류이다. 유형4는 수익, 비용 인식 오류, 유형5는 부채 누락 및 중복 계상 등의 오류, 유형6은 자산 및 부채 계정분류 오류이다⁶⁾. 유형1~3은 모두 자산 관련 회계오류인데, 합계를 보면 유형3이 약 21.8%로 가장 많았고, 이후 유형1은 약 21.3%, 유형2는 약 19.1%로 3가지 유형이 총 회계오류의 약 62%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자산과 관련된 회계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자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결산업무 참여자들의 업무 숙지가 미흡하다는 점이고, 간접적으로는 접근 가능한 정보의 부족, 회계제도의 미비가 있다(김봉환·전예진, 2022).

[표 11] 감사원 유형별 회계오류 지적 건수

부처명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유형6
경찰청	4	2	2	2	1	0
고용노동부	7	1	0	3	5	1
공정거래위원회	1	1	1	0	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1	1	2	1	3
관세청	1	0	0	0	2	1
교육부	4	2	5	3	2	1
국가보훈처	1	2	0	0	2	3
국방부	6	7	3	8	5	1
국세청	1	0	1	0	2	0
국토교통부	6	14	7	4	7	1

6) ‘기타’ 항목도 존재하지만 5년간 총 10개에 불과하여 [표 11]에 넣지 않았다.

국회	1	0	1	1	0	1
금융위원회	0	1	2	1	2	0
기상청	2	1	0	2	2	0
기획재정부	8	4	5	7	1	7
농림축산식품부	5	4	3	2	0	1
농촌진흥청	1	0	2	2	0	1
대법원	1	0	1	0	0	1
문화재청	0	2	3	2	0	1
문화체육관광부	2	2	11	6	0	3
방송통신위원회	0	0	0	1	1	1
방위사업청	4	4	1	1	0	1
법무부	1	1	2	1	2	0
법제처	0	0	0	0	0	0
병무청	0	0	2	1	1	0
보건복지부	0	4	4	2	1	0
산림청	5	3	6	1	1	0
산업통상자원부	1	2	0	2	0	0
소방청	0	0	2	1	0	0
식품의약품안전처	0	0	2	2	0	1
여성가족부	1	5	0	0	0	0
원자력안전위원회	0	0	0	0	0	0
인사혁신처	0	0	0	0	0	0
조달청	1	0	0	0	0	0
중소벤처기업부	2	0	2	3	0	1
통계청	0	0	1	1	0	0
통일부	4	4	2	4	1	0
해양경찰청	2	2	3	1	0	0
해양수산부	4	5	7	3	0	1
행정안전부	0	2	2	0	0	0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5	0	0	0	0	0
환경부	5	3	6	4	0	1
합계	88	79	90	73	40	33

제 2 절 회귀분석 결과

1. 국가재무제표의 회계오류가 보수적 회계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의 첫 번째 결과는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국가재무제표의 회계오류가 보수적 회계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귀분석을 수행한 것이다. 합동 OLS 모형으로 분석을 진행했고, 결과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에 앞서 변수들의 VIF값을 확인하였는데 모두 약 1에서 2.3 정도의 값을 가지고 있었으며, VIF의 평균은 약 1.7로 나타나 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2]는 국가재무제표의 회계오류가 첫 번째 종속변수인 미수채권 대손충당금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 보고 여부와 금액은 5% 수준에서, 비율은 10% 수준에서 다음 연도 미수채권 대손충당금 비율에 유의미하게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은 다음 해의 미수채권 대손충당금 비율에 전반적으로 강한 정(+)의 영향을 미치기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수록, 그 금액이 클수록 그리고 프로그램충원가 대비 오류의 비율이 높을수록 중앙관서가 대손충당금을 더욱 보수적으로 설정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감사원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오류의 경우, 단기 미수채권 대손충당금 비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손충당금 설정에는 오류수정과 관련된 손익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전기오류수정과 감사원 지적 오류의 차이점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전기오류수정은 이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고, 재무제표 또는 주식에 명시되기 때문에 이익효과가 외부에 드러난다(김문현, 2011). 반면, 감사원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오류는 재무제표 관련 내용이지만 재무제표가 아닌 결산검사보고서에 별도로 제시되어 이익효과가 외부에 노출되는 정도와 외부의 관심이 덜할 것이다.

통제변수의 경우, 부채비율은 음(-)의 방향으로, 장기대여금 대손충당금 비율은 양(+)의 방향으로 이듬해 미수채권 대손충당금 비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회계보수주의가 약화되고, 기관 회계정책의 보수주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 중 하나인 장기대여금 대손충당금 비율이 높을수록 회계보수주의가 강화된다는 것을 뜻한다. 정성호·최수영(2017)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비율이 높으면 재정이 건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재정건전성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 일종의 분식 회계선택을 하기 위해 대손충당금 규모가 낮아짐을 밝혀냈다. 김봉환(2013a)은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기업회계와 달리 정부회계가 회계보수주의에 대한 채권자들의 요구가 크지 않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보수주의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표 12]에서는 이 논의를 적용하여 부채비율의 결과를 해석하려 한다.

[표 12] 다중회귀분석 결과 1 (가설 1)

	모델 1			
	DV: 단기미수채권 대손충당금 비율(t+1)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 보고 여부	15.789** (7.564)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 금액(log)		0.594** (0.296)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 비율			0.105* (0.057)	
감사원 결산검사 시 지적된 오류 건수				-0.995 (0.684)
자산(log)	-0.575 (0.384)	-0.574 (0.385)	-0.521 (0.383)	-0.276 (0.403)
부채비율	-0.005** (0.003)	-0.005** (0.003)	-0.005** (0.003)	-0.006** (0.003)

관리운영비(log)	-0.079 (0.32)	-0.079 (0.32)	-0.063 (0.321)	-0.128 (0.321)
단기대여금 대손충당금 비율	-0.057 (0.093)	-0.055 (0.093)	-0.042 (0.093)	-0.053 (0.093)
장기대여금 대손충당금 비율	0.578*** (0.115)	0.578*** (0.115)	0.575*** (0.113)	0.574*** (0.115)
장기미수채권 대손충당금 비율	-0.098 (0.069)	-0.098 (0.069)	-0.089 (0.069)	-0.098 (0.069)
상수	27.282*** (8.599)	27.428*** (8.598)	27.879*** (8.591)	27.206*** (8.681)
연도	포함	포함	포함	포함
N	420	420	420	420
R ²	0.125	0.125	0.123	0.12
Adj R ²	0.091	0.09	0.088	0.085

주: ()은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 * p-value<0.10, ** p-value<0.05, *** p-value<0.01.

[표 13]은 국가재무제표의 회계오류가 두 번째 종속변수인 손익 인식 관련 보수주의 계정과목 금액의 합(=감가상각비+연구개발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 보고 여부, 금액, 비율은 5% 수준에서, 감사원 결산검사 시 지적된 오류 건수는 1% 수준에서 양(+)의 방향으로 보수주의 계정과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거나 감사원 결산검사 시 지적된 오류가 많을수록 손익 인식과 관련된 계정과목의 회계처리가 더욱 보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이 결과에서는 전기오류수정손익과 감사원 지적 오류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어느 오류가 발생하든 순자산과 순이익에 점진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보수적으로 계상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기관의 규모를 의미하는 자산은 음(-)의 방향으로, 관리운영비는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처럼 두 변수가 상반된 방향의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보아 정부 기관의 규모는 손익 인식 관련 보수주의 계정과목에 일관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13] 다중회귀분석 결과 2 (가설 1)

	모델 2			
	DV: 손익 인식 관련 보수주의 계정과목(log) (=감가상각비+연구개발비)(t+1)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 보고 여부	1.843** (0.862)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 금액(log)		0.076** (0.034)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 비율			0.017** (0.007)	
감사원 결산검사 시 지적된 오류 건수				0.337*** (0.076)
자산(log)	-0.104** (0.044)	-0.105** (0.044)	-0.1** (0.043)	-0.156*** (0.045)
부채비율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관리운영비(log)	0.704*** (0.036)	0.705*** (0.036)	0.708*** (0.036)	0.706*** (0.036)
단기대여금 대손충당금 비율	-0.014 (0.011)	-0.014 (0.011)	-0.012 (0.011)	-0.009 (0.01)
장기대여금 대손충당금 비율	0.019 (0.013)	0.019 (0.013)	0.018 (0.013)	0.016 (0.013)
장기미수채권 대손충당금 비율	0.007 (0.008)	0.007 (0.008)	0.008 (0.008)	0.009 (0.008)
상수	7.559*** (0.98)	7.557*** (0.979)	7.573*** (0.975)	8.448*** (0.969)
연도	포함	포함	포함	포함
N	420	420	420	420
R ²	0.614	0.614	0.616	0.627
Adj R ²	0.599	0.599	0.6	0.613

주: ()은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 * p-value<0.10, ** p-value<0.05, *** p-value<0.01.

[표 14]는 국가재무제표의 회계오류가 세 번째 종속변수인 자산 평가 관련 보수주의 계정과목 금액의 합(=대손상각비+자산감액손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중대한 오류는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산 평가 관련 보수주의 계정과목도 순자산과 순이익에 즉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두 변수가 유의미한 관계에 있을 것으로 예측했으나 그렇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오히려 순자산과 순이익에 점진적으로 영향을 주는 항목을 보수적으로 회계처리하여 장기적 결과를 고려한다고 볼 수 있다.

감사원 결산검사 시 지적된 오류 건수는 1% 수준에서 해당 종속변수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다. 즉, 감사원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오류가 많을수록 자산 평가와 관련된 계정과목 회계처리가 더욱 보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표 11]에서 확인했듯이 감사원 결산검사에 따른 회계오류는 자산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결산검사 시 발견된 오류에 대한 대응으로 자산 평가를 더 보수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수익, 비용 인식 관련 오류도 5년간 총 73건으로 적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표 13]에서 감사원 지적 오류 발생 후 손익 인식 관련 계정과목을 더 보수적으로 처리함을 확인하였다.

[표 14] 다중회귀분석 결과 3 (가설 1)

	모델 3			
	DV: 자산 평가 관련 보수주의 계정과목(log) (=대손상각비+자산감액손실)(t+1)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 보고 여부	3.349 (2.142)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 금액(log)		0.129 (0.084)		
중대한			-0.002	

전기오류수정손익 비율			(0.016)	
감사원 결산검사 시 지적된 오류 건수				1.014*** (0.187)
자산(log)	0.51*** (0.109)	0.51*** (0.109)	0.535*** (0.109)	0.341*** (0.11)
부채비율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2*** (0.001)
관리운영비(log)	0.074 (0.091)	0.075 (0.091)	0.066 (0.091)	0.084 (0.088)
단기대여금 대손충당금 비율	-0.007 (0.026)	-0.007 (0.026)	-0.004 (0.026)	-0.005 (0.025)
장기대여금 대손충당금 비율	0.066** (0.032)	0.066** (0.032)	0.065** (0.033)	0.061* (0.031)
장기미수채권 대손충당금 비율	0.074 (0.091)	0.075 (0.091)	0.066 (0.091)	0.084 (0.088)
상수	-0.143 (2.435)	-0.122 (2.434)	0.289 (2.437)	2.267 (2.374)
연도	포함	포함	포함	포함
N	420	420	420	420
R ²	0.192	0.192	0.187	0.242
Adj R ²	0.16	0.16	0.155	0.212

주: ()은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 * p-value<0.10, ** p-value<0.05, *** p-value<0.01.

요약하자면,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보고 여부, 금액(log), 비율)은 단기미수채권 대손충당금 비율과 손익 인식 관련 보수주의 계정과목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가설 1-1, 1-2, 1-3을 지지한다. 감사원 결산검사 시 지적된 오류 건수는 손익 인식과 자산 평가 관련 보수주의 계정과목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했기에 가설 1-4를 지지한다. 각 독립변수가 모든 종류의 보수적 회계선택에 대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국가재무제표의 회계오류가 많을수록 다음 연도의 보수적 회계선택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검증했기에 가설 1의 내용은 충족된

다. 이로써 중앙정부는 회계품질 개선을 통해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 회복, 대리인비용 감소를 위한 노력으로 회계보수주의라는 장치를 이용하여 책임성을 구현한다고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유한시차분포모형(Finite Distributed Lag Model)을 적용하여 회귀방정식에 (t-2)기까지의 독립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해보았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전기오류수정 항목이 오류 발생연도 이후 1~2년 이내에 계상되기 때문에(김문철·황인태, 1996) 기간을 (t-2)기로 제한하였다. 분석 결과, 종속변수가 단기미수채권 대손충당금 비율일 때 (t-2)기의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 비율과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나타냈고, 종속변수가 자산 평가 관련 보수주의 계정과목일 때 (t-1)기의 감사원 지적 오류와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그 외에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일부 변수의 경우 시차효과가 존재하였지만 전반적으로 국가재무제표의 회계오류와 보수적 회계선택 사이에 시차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기오류수정손익 보고 이후 회계정보의 신뢰성 상실은 2분기 정도 지속하다가 사라진다는 국내 연구결과가 있고(오명전·손성규, 2012), 미국에서는 4분기까지 지속한다는 결과가 있다(Wilson, 2008). 이처럼 오류로 인한 신뢰성 상실은 일반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않기에 국가재무제표의 회계오류와 보수적 회계선택의 관계도 1년의 시차를 두었을 때 유의미하지만 그 이상의 시차에선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국가재무제표의 회계오류와 보수적 회계선택 관계의 조절효과

본 연구의 두 번째 결과는 가설 2-1~2-2를 검증하기 위해 중앙관서의 유형이 국가재무제표 회계오류와 보수적 회계선택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분석한 것이고, 이는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⁷⁾

각 독립변수의 위계적 회귀모형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상호작용항 투입 후 R^2 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R^2 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면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15]는 종속변수가 단기미수채권 대손충당금 비율일 때의 조절효과 분석 내용인데, 모든 독립변수에서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중앙관서의 유형은 회계오류와 대손충당금 비율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표 10]의 기술통계량을 보면 미수채권 대손충당금 비율이 부처별로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대손충당금 설정 시 기관장과 담당자의 재량이 개입되기 때문에(정창훈·유갑열, 2015) 부처의 유형보다 부처 내 개인의 재량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부처 유형 1에 해당하는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일수록 단기미수채권 대손충당금 비율에 미치는 정(+)의 영향이 유의하게 도출되어 김봉환(2013b)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보완하는 것으로 본다.

7) 중앙부처를 부처 유형 1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조절효과 분석 시 이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을 시행하였고, 결과는 대동소이하였다.

[표 15] 조절효과 회귀분석 결과 1 (가설 2)

	모델 1							
	DV: 단기미수채권 대손충당금 비율 (t+1)							
	IV: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 보고 여부		IV: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 금액(log)		IV: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 비율		IV: 감사원 결산검사 시 지적된 오류 건수	
중대한 전기오류 수정손익 보고 여부	15.386 ** (7.492)	19.722 * (11.214)						
중대한 전기오류 수정손익 금액(log)			0.576* (0.293)	0.706 (0.466)				
중대한 전기오류 수정손익 비율					0.081 (0.058)	-0.211 (0.771)		
감사원 결산검사 시 지적된 오류 건수							-0.983 (0.678)	-1.537 (1.163)
자산(log)	-0.85 ** (0.4)	-0.852 ** (0.401)	-0.845 ** (0.4)	-0.847 ** (0.402)	-0.769 * (0.398)	-0.787 * (0.401)	-0.563 (0.417)	-0.557 (0.428)
부채비율	-0.007 *** (0.003)	-0.007 *** (0.003)	-0.007 *** (0.003)	-0.007 *** (0.003)	-0.007 *** (0.003)	-0.007 *** (0.003)	-0.008 *** (0.003)	-0.008 *** (0.003)
관리운영비 (log)	0.293 (0.343)	0.289 (0.344)	0.291 (0.343)	0.29 (0.344)	0.278 (0.344)	0.288 (0.345)	0.252 (0.344)	0.251 (0.357)
단기대여금 대손충당금 비율	-0.034 (0.093)	-0.035 (0.093)	-0.033 (0.093)	-0.033 (0.093)	-0.022 (0.093)	-0.023 (0.093)	-0.03 (0.093)	-0.033 (0.094)
장기대여금 대손충당금	0.661 *** (0.118)	0.662 *** (0.118)	0.661 *** (0.118)	0.661 *** (0.118)	0.652 *** (0.118)	0.654 *** (0.119)	0.656 *** (0.118)	0.659 *** (0.119)

비율								
장기미수채권 대손충당금 비율	-0.061 (0.293)	-0.064 (0.07)	-0.062 (0.069)	-0.064 (0.07)	-0.055 (0.069)	-0.054 (0.069)	-0.06 (0.069)	-0.054 (0.07)
부처 유형1	9.766 *** (3.654)	10.251 *** (3.729)	9.71 *** (3.656)	10.014 *** (3.733)	9.219 ** (3.692)	9.218 ** (3.708)	9.968 *** (3.664)	8.577* (5.027)
부처 유형2	-3.343 (3.203)	-3.227 (3.286)	-3.4 (3.204)	-3.294 (3.289)	-3.209 (3.214)	-3.412 (3.238)	-3.181 (3.214)	-4.963 (4.672)
독립변수X 부처유형1		-10.534 (15.431)		-0.263 (0.603)		0.292 (0.771)		0.539 (1.301)
독립변수X 부처유형2		-2.579 (14.912)		-0.097 (0.586)		0.921 (1.504)		0.677 (1.324)
상수	24.381 *** (8.581)	24.219 *** (8.614)	24.55 *** (8.58)	24.41 *** (8.619)	25.394 *** (8.578)	25.856 *** (8.638)	24.223 *** (8.665)	25.518 *** (8.952)
연도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N	420	420	420	420	420	420	420	420
R ²	0.146	0.147	0.146	0.146	0.142	0.142	0.142	0.143

주: ()은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 * p-value<0.10, ** p-value<0.05, *** p-value<0.01.

[표 16]은 종속변수가 손익 인식 관련 보수주의 계정과목일 때 조절효과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일수록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 보고 여부, 금액이 손익 인식 관련 보수주의 계정과목에 미치는 영향이 강해졌다. 주요 고객이 정부부처와 행정기관일 경우, 국민과의 정보비대칭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감가상각비, 연구개발비를 더욱 보수적으로 처리하여 국민의 정보요구에 대응하고, 대리인비용을 감소하려 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각각의 모형에서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일수록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완전한 강화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경제부처일수록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 비율이 손익 인식 관련 보수주의 계정과목에 미치는 영

향이 강해졌다. 경제부처에서는 중대한 오류 금액의 프로그램충원가 대비 비율이 의미가 있었다.

조절효과는 감사원 지적 오류에서 발생하지 않았고, 중대한 전기오류 수정손익에서만 발생했다. 앞서 언급했듯 전기오류수정은 이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고, 이익효과가 외부에 드러난지만, 감사원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오류는 재무제표가 아닌 결산검사보고서에 별도로 제시되어 이익효과가 외부에 노출되는 정도와 외부의 관심이 덜할 것이다. 따라서 감사원 지적 오류보다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발생했을 때 외부의 감시·감독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 유형에 따른 회계책임 이행 의지가 더 강해져 보수적 회계선택이 강화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16] 조절효과 회귀분석 결과 2 (가설 2)

	모델 2							
	DV: 손익 인식 관련 보수주의 계정과목(log) (=감가상각비+연구개발비) (t+1)							
	IV: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 보고 여부		IV: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 금액(log)		IV: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 비율		IV: 감사원 결산검사 시 지적된 오류 건수	
중대한 전기오류 수정손익 보고 여부	1.878 ** (0.858)	0.442 (1.279)						
중대한 전기오류 수정손익 금액(log)			0.077 ** (0.034)	0.023 (0.053)				
중대한 전기오류 수정손익 비율					0.019 *** (0.007)	-0.038 (0.087)		
감사원 결산검사							0.333 *** (0.076)	0.418 *** (0.13)

시 지적된 오류 건수								
자산(log)	-0.092 ** (0.046)	-0.092 ** (0.046)	-0.093 ** (0.046)	-0.092 ** (0.046)	-0.085 * (0.045)	-0.092 ** (0.045)	-0.141 *** (0.047)	-0.137 *** (0.048)
부채비율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관리운영비 (log)	0.681 *** (0.039)	0.682 *** (0.039)	0.681 *** (0.039)	0.682 *** (0.039)	0.681 *** (0.039)	0.684 *** (0.039)	0.682 *** (0.039)	0.677 *** (0.04)
단기대여금 대손충당금 비율	-0.014 (0.011)	-0.014 (0.011)	-0.014 (0.011)	-0.014 (0.011)	-0.013 (0.011)	-0.013 (0.011)	-0.01 (0.01)	-0.01 (0.011)
장기대여금 대손충당금 비율	0.01 (0.014)	0.01 (0.013)	0.01 (0.014)	0.01 (0.013)	0.009 (0.013)	0.009 (0.013)	0.008 (0.013)	0.008 (0.013)
장기미수채권 대손충당금 비율	0.004 (0.008)	0.005 (0.008)	0.004 (0.008)	0.005 (0.008)	0.005 (0.008)	0.006 (0.008)	0.006 (0.008)	0.005 (0.008)
부처 유형1	-0.565 (0.419)	-0.72* (0.425)	-0.573 (0.418)	-0.71* (0.426)	-0.705* (0.42)	-0.689 (0.42)	-0.59 (0.412)	-0.482 (0.564)
부처 유형2	0.599 (0.367)	0.556 (0.375)	0.593 (0.367)	0.556 (0.375)	0.638* (0.366)	0.572 (0.367)	0.516 (0.361)	0.89* (0.525)
독립변수X 부처유형1		3.384* (1.761)		0.117* (0.069)		0.057 (0.087)		-0.044 (0.146)
독립변수X 부처유형2		0.949 (1.761)		0.034 (0.067)		0.308* (0.17)		-0.146 (0.149)
상수	7.732 *** (0.983)	7.788 *** (0.983)	7.71 *** (0.982)	7.788 *** (0.983)	7.764 *** (0.976)	7.887 *** (0.979)	8.624 *** (0.973)	8.411 *** (1.004)
연도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N	420	420	420	420	420	420	420	420

R ²	0.619	0.623	0.62	0.622	0.623	0.626	0.632	0.633
----------------	-------	-------	------	-------	-------	-------	-------	-------

주: ()은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 * p-value<0.10, ** p-value<0.05, *** p-value<0.01.

[표 17]은 종속변수가 자산 평가 관련 보수주의 계정과목일 때 조절효과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인데, 정부 또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관한 부처 유형 1은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종합해보면 3개의 종속변수 중 손익 인식 관련 보수주의 계정과목일 때만 중대한 오류와의 관계를 강화했고, 나머지 2개에서 부처 유형 1이 회계오류와 보수적 회계선택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1을 기각한다.

가설 2-2의 경우, 종합하면 경제부처일수록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 비율이 손익 인식 관련 보수주의 계정과목에 미치는 영향이 강해졌으나 감사원 결산검사 시 지적된 오류 건수가 자산 평가 관련 보수주의 계정과목에 미치는 정(+)의 영향이 약화하여 일관된 결과가 도출되지 못했다. 따라서 가설 2-2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경제부처에 대한 더미변수가 자산 평가 관련 계정과목 금액에 강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경제부처는 자산을 보수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17] 조절효과 회귀분석 결과 3 (가설 2)

	모델 3							
	DV: 자산 평가 관련 보수주의 계정과목(log) (=대손상각비+자산감액손실) (t+1)							
	IV: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 보고 여부		IV: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 금액(log)		IV: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 비율		IV: 감사원 결산검사 시 지적된 오류 건수	
중대한 전기오류 수정손익 보고 여부	3.533* (2.075)	5.658* (3.102)						
중대한			0.135*	0.226*				

전기오류 수정손익 금액(log)			(0.081)	(0.129)				
중대한 전기오류 수정손익 비율					0.008 (0.016)	0.153 (0.214)		
감사원 결산검사 시 지적된 오류 건수							0.985 *** (0.181)	1.625 *** (0.306)
자산(log)	0.55 *** (0.111)	0.548 *** (0.111)	0.55 *** (0.111)	0.549 *** (0.111)	0.571 *** (0.11)	0.569 *** (0.111)	0.392 *** (0.112)	0.438 *** (0.113)
부채비율	0.002 *** (0.001)	0.002 *** (0.001)	0.002 *** (0.001)	0.002 *** (0.001)	0.002 *** (0.001)	0.002 *** (0.001)	0.002 *** (0.001)	0.003 *** (0.001)
관리운영비 (log)	-0.028 (0.095)	-0.03 (0.095)	-0.029 (0.095)	-0.029 (0.095)	-0.033 (0.095)	-0.033 (0.096)	-0.022 (0.092)	-0.074 (0.094)
단기대여금 대손충당금 비율	-0.008 (0.026)	-0.008 (0.026)	-0.007 (0.026)	-0.008 (0.026)	-0.005 (0.026)	-0.005 (0.026)	0.003 (0.025)	0.004 (0.025)
장기대여금 대손충당금 비율	0.019 (0.033)	0.019 (0.033)	0.019 (0.033)	0.019 (0.033)	0.017 (0.033)	0.017 (0.033)	0.015 (0.032)	0.007 (0.031)
장기미수채권 대손충당금 비율	0.036* (0.019)	0.035* (0.019)	0.036* (0.019)	0.034* (0.019)	0.037* (0.019)	0.037* (0.019)	0.041** (0.019)	0.029 (0.019)
부처 유형1	-2.329 ** (1.012)	-2.084 ** (1.031)	-2.342 ** (1.012)	-2.118 ** (1.032)	-2.368 ** (1.023)	-2.319 ** (1.027)	-2.416 ** (0.98)	-2.017 (1.23)
부처 유형2	3.729 *** (0.887)	3.78 *** (0.909)	3.716 *** (0.887)	3.779 *** (0.909)	3.733 *** (0.891)	3.751 *** (0.897)	3.491 *** (0.86)	6.747 *** (1.23)

독립변수X 부처유형1		-5.297 (4.268)		-0.263 (0.603)		-0.146 (0.214)		-0.177 (0.343)
독립변수X 부처유형2		-1.145 (4.125)		-0.097 (0.586)		-0.06 (0.417)		-1.281 *** (0.349)
상수	0.591 (2.377)	0.515 (2.383)	0.621 (2.376)	0.529 (2.383)	0.933 (2.377)	0.805 (2.393)	2.988 (2.319)	1.311 (2.357)
연도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N	420	420	420	420	420	420	420	420
R ²	0.246	0.248	0.245	0.248	0.241	0.242	0.292	0.316

주: ()은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 * p-value<0.10, ** p-value<0.05, *** p-value<0.01.

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 요약 및 함의

본 연구는 국가재무제표의 회계오류가 보수적 회계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2011회계연도부터 2020회계연도까지의 42개 중앙관서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회계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은 재무제표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감소하여 정보이용자가 회계정보를 불신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보수적 회계선택은 수익이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을 더 빨리 반영하는 것으로서 수익의 품질(earnings quality)을 나타내는 대리변수이자 오류로 인해 저하된 회계품질 회복 및 회계책임의 이행과 확보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다. 보수적 회계선택, 즉, 회계보수주의는 정부와 국민 사이의 정보비대칭을 완화하여 대리인비용을 감소시키고 재무제표 신뢰성 회복에 도움을 주지만 재정운영결과가 악화하고 기관장은 그에 따른 정치적 압력의 영향을 받을 여지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는 외부정보이용자인 국민의 국가회계 품질에 대한 불신을 방지하고자 회계보수주의를 강화하여 수익의 질을 높일 유인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다. 그 바탕이 되는 근거로 정부가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고 정당화할 의무인 회계책임이 존재한다. 따라서 회계오류가 많을수록 보수적 회계선택을 강화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회계오류는 중대한 전기오류 수정손익 보고 여부, 금액, 비율과 감사원 결산검사 시 지적된 오류 건수로 측정하였고, 보수적 회계선택은 단기미수채권 대손충당금 비율, 손익 인식 관련 보수주의 계정과목 금액과 자산 평가 관련 보수주의 계정과목 금액으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관서의 회계오류가 많을수록 이듬해 보수적 회계선택이 강화되었다.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보고 여부, 금액(log), 비율)은 단기미수채권 대손충당금 비율과 손익 인식 관련 보

수주의 계정과목에 정(+)¹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감사원 결산검사 시 지적된 오류 건수는 손익 인식과 자산 평가 관련 보수주의 계정과목에 정(+)¹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부처 유형 중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일수록 회계오류가 보수적 회계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강화되었다.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 보고 여부, 금액이 손익 인식 관련 보수주의 계정과목 금액에 미치는 정(+)¹의 영향이 강해졌다. 다만 조절변수 자체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부(-)¹의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경제부처의 경우,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 비율이 손익 인식 관련 보수주의 계정과목에 미치는 영향이 강해졌으나 감사원 결산검사 시 지적된 오류 건수가 자산 평가 관련 보수주의 계정과목 금액에 미치는 정(+)¹의 영향을 약화하여 일관적인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과 감사원 지적 오류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두 오류의 상이한 성격에서 기인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전자의 경우 재무제표 또는 주식에 명시되어 이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고 이익효과가 외부에 드러나지만, 후자의 경우 재무제표가 아닌 결산검사보고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이익효과의 외부 노출 및 관심의 정도가 덜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이론적·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부처의 회계오류와 회계보수주의의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국가재무제표 회계품질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제시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공 부문 회계오류에 관한 연구는 현황분석 및 정책제언 형태의 질적 분석이 중심을 이루고 있기에 양적 분석을 진행하여 관련 문헌 확장에 이바지한 의의가 있다. 회계오류가 이듬해 보수적 회계선택을 강화한다는 결과를 밝혀내어 국가가 국민과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재무제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회계오류로 인해 재무제표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감소한다는 점은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차이가 없지만, 민간기업은 오류보고 이후에 기업가치 하락, 자본비용 증가, 경영자나 사외이사의 교체 발생(마희영, 2010) 반면 국가는 정보 투명성과 국민에 대한 책

임성에 문제가 생긴다. 회계책임은 기업보다 정부에서 더 중요하며(심재영, 2016), 정부의 공공회계책임 달성 의무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실질적으로 회계보수주의를 약화할 유인보다 정보 투명성과 책임성 차원에서 회계보수주의를 강화할 유인이 더 큰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부처 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부처의 주요 고객이 정부부처와 행정기관이고, 주로 국가 운영과 국가 자원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김기환, 2005) 정부 대상 부처의 경우, 회계오류와 보수적 회계선택의 관계가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국민과 접촉할 기회가 적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가 더 낮아 정보비대칭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는(김봉환, 2013b) 해당 부처들은 회계오류 발생 후 회계처리를 더욱 보수적으로 함으로써 대리인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둘째, 국가 회계품질 평가의 방법론을 보완하였다. 국가재무제표의 회계오류에 관한 선행연구(김봉환·한승엽, 2016; 정아름·정도진, 2020; 이은경, 2020; 김봉환·전예진, 2022)뿐만 아니라 보수적 회계선택에 관한 선행연구(마희영, 2010; 김봉환, 2013b)에서 사용한 변수를 토대로 회계오류와 보수적 회계선택을 다양하게 측정하고, 두 변수의 연관성을 알아봄으로써 새로운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의 한계는 첫째, 자료의 불완전성이다. 회계오류에는 중대하지 아니한 전기오류수정손익도 존재하는데 이를 독립변수에 넣지 못하였다. 중대하지 아니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재정운영표상 프로그램원가, 프로그램수익,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표시되지 않으며, 주석을 통해 제한적인 정보만 얻을 수 있다⁸⁾(김봉환·한승엽, 2016). 이에 관하여 통합된 데이터가 부재하고, 10년 동안의 모든 기관 결산서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독립변수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고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회계오류를 다각도로 파악하였다. 또한, 종속변수로 사용된 보수주의 계정과목의 경우, 기업회계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자료 및 결과의 한계가 있다. 기업회계와 정부회계 재무제표의 차이로 많은 계정과목이 제외되었기에 그러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수적 회계선택과 관련하여 정부회계에서 활용 가능한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둘째, 조절변수 자료와 조절효과 분석 결과의 한계가 존재한다. 조절변수 중 정부 또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처에 대한 분류 기준이 다소 모호하였다. 선행연구와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참고했으나 법령 등의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최대한 적절하게 분류하고자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였고, 민감도 분석을 시행하여 대동소이한 결과를 얻었다. 또한, 조절변수를 이용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를 보면 해석에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결과적으로 관련 가설이 모두 기각되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부처 내 결산과정 참여자, 즉, 국가회계 담당자와 사업 담당자 등의 역량 강화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한다(김봉환·전예진, 2022; 이은경, 2020). 그에 따라 후속연구

8)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6. 전기오류수정 및 회계처리방법의 변경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예시) “문화체육관광부는 중대하지 아니한 전기오류수정에 대하여 전기오류수정이익(비배분수익) 6,061백만원 및 전기오류수정손실(비배분비용) 940백만원을 당기 재정운영표에 반영하였습니다.”

에서는 부처 유형이라는 거시적인 측면보다 부처 내 결산 담당자의 역량이라는 미시적인 측면을 실증분석에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민이 실질적으로 회계정보를 활용하는지와 회계책임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고려해야 한다. 국민은 국가 운영의 재원인 조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공공재 공급에 조세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하는데, 이는 회계정보를 통해 가능하며, 그에 따라 국민은 회계정보의 외부이용자에 해당한다(허웅·윤성식, 2011). 발생주의 회계정보는 현금주의와 달리 정부의 재정상태, 재정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접근성과 정보 이해능력, 활용능력 등에서 제도 도입 취지와 괴리를 보인다(김인태 외, 2021). 회계오류, 회계보수주의 등에 대한 관심 증대 및 회계성과에 대한 책임추궁을 위해서 정보이용자들이 국가회계제도에 접근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김인태 외, 2021).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의 국민이 발생주의 재무제표가 공표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기에(심재영·윤재원, 2016) 일례로 국민이 보수적 회계선택을 이해하고, 보수적 회계선택 강화를 회계책임 이행으로 인식할 확률은 낮다. 즉,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국가회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관한 이해력이 뒷받침되어야 국가는 회계정보의 신뢰성, 정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계책임을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회계오류와 회계보수주의의 관계를 매개하는 요소가 실제로 회계책임인지, 정부가 회계책임에 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이행하는지는 조사하지 못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회계오류에 대하여 실제로 대응하는 방법 및 오류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비책이 있다면 무엇인지는 후속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이러한 한계점들이 보완된다면 정부의 회계품질에 관해 향후 더 풍부하고 견고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연구의 중요성과 실질적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리라 본다.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품질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토대로 후속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감사원. (2021).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보고 1.
- 강민정·이호영·이경화. (2012). 국제회계기준이 보수주의 회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조기 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회계학연구. 37(2), 237-278.
- 국세청 용어사전.
- 국회예산정책처. (2022). 2022 대한민국 재정.
-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국가회계편람.
-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재정정보원.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 김기환. (2005). 정보화사업의 효과적인 평가를 위한 정부부처 유형분류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5(1), 241-266.
- 김문현. (2011). 재량적발생, 전기오류수정과 회계변경을 이용한 이익조정의 선택. 세무와회계저널. 12(4), 103-120.
- 김문철·황인태. (1996). 전기손익수정항목을 통한 이익조정행위에 대한 연구-이익유연화를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21(4), 123-142.
- 김봉환. (2013a). 광역지방자치단체 미수세금대손충당금의 차이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7(4), 213-230.
- 김봉환. (2013b). 국가재무제표 상 미수채권대손충당금 비율의 중앙관서 간 차이 분석. 재정학연구. 6(3), 31-60.
- 김봉환·전예진. (2021).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품질실태와 품질제고 방안: 회계검토를 중심으로. 감사논집. 37, 37-59.
- 김봉환·전예진. (2022). 국가결산 참여자 관점에서 살펴본 국가재무제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연구: 자산관련 회계오류를 중심으로. 정부회계연구. 20(1), 71-109.
- 김봉환·한승엽. (2016). 국가재무제표의 정확성 추세에 관한 연구: 회계오류를 중심으로. 회계저널. 25(5), 168-208.

- 김윤권·윤두섭. (2011). 공공부문의 책임성 확보 방안: 기업 거버넌스의 주인-대리인 시각에서. *현대사회와 행정*. 21(2), 27-51.
- 김인태·이준범·고영준. (2021). 제도적 책임성과 보수적 회계선택: 기초지방자치단체 대손충당금 설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5(3), 217-252.
- 김정옥·배길수. (2009). 보수주의와 발생액. *회계저널*. 18(2), 1-31.
- 김진섭. (2015). 기업지배구조와 회계보수주의 관련성 연구. *세무회계연구*. 45, 257-279.
- 마희영. (2010). 오류보고가 보수주의 정책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0(1), 1-34.
- 민인식·최필선. (2022).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 STATA Panel Data Analysis : Version 16-17. 과주: 지필미디어.
- 백원선·이수로. (2004). 보수주의, 이익지속성 및 가치평가. *회계학연구*. 29(1), 1-28.
- 손성규·정기위·배창현. (2013). 회계오류에 대한 외부감사의 역할. *회계저널*. 22(3), 71-99.
- 송혁준·김문현·최종학. (2008). 감사인의 비감사 서비스 제공과 기업의 전기오류 수정 사이의 관계. *회계학연구*. 33(4), 77-110.
- 신현걸·최창규·김현식. (2022). IFRS 중급 회계. 서울: 지승.
- 신호영. (2003). 기업특성이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미치는 영향. *회계와 감사연구*. 39, 115-135.
- 심재영. (2016). 정부재무보고에서 회계책임(Accountability) 목적을 위한 정보의 역할과 요건. *정부회계연구*. 14(2), 81-104.
- 심재영·윤재원. (2016). 국가재무제표의 활용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주된 정보 이용자인 국민을 중심으로. *상업교육연구*. 30(1), 87-122.
- 엄석진. (2009). 행정의 책임성: 행정이론간 충돌과 논쟁. *한국행정학보*. 43(4), 19-45.
- 열린재정 재정용어사전.
- 오광욱·마희영. (2014).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발생액의 질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

- 계연구. 56, 20-38.
- 오명전·손성규. (2012). 오류수정 이후의 회계정보 신뢰성 변화. 회계학연구. 37(1), 41-85.
- 오형주·전범진. (2022.06.12.). 법원 "회계오류로 인한 주가 하락 배상해야". 한국 경제.
- 유민봉. (2021). 한국행정학. 서울: 박영사.
- 윤승준. (2005). 오류수정의 재무보고방법과 주식시장의 반응. 회계 세무와 감사 연구. 42, 27-58.
- 이원우. (2011). 현대적 민주법치국가에 있어서 행정통제의 구조적 특징과 쟁점. 행정법연구. 29, 105-133.
- 이은경. (2020).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언: 오류총액에 대한 현황분석을 중심으로. 예산정책연구. 9(3), 163-186.
- 정도진·김중현·마성민. (2015). 국가결산보고서 활용성 증대 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60, 231-256.
- 정성호·최수영. (2017).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비율이 대손충당금설정에 미치는 영향: 특·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정부회계연구. 15(1), 1-19.
- 정아름·정도진. (2020). 감사원 결산검사에 따른 국가재무제표 오류유형 분석 및 개선방안. 회계정보연구. 38(2), 159-185.
- 정창훈·유갑열. (2015). 광역자치단체의 미수세금과 미수세외수입금의 대손충당금 설정을 차이에 관한 연구. 정부회계연구. 13(2), 1-28.
- 조영일·김지현·한우리·조유정. (2015). 임상 연구에서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의 비교 및 통합.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4(4), 1113-1131.
- 최다현. (2022.05.18.). 공공기관 회계 오류 막자...안팎으로 회계 관리 강화. 전자신문.
- 최연식·박진하·권대현. (2016).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의 공공부문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와 우리나라 국가 재무보고관련 규정체계의 비교연구. 세무와회계저널. 17(2), 193-222.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2020). 알기 쉬운 국가회계 2020.
- 허웅·윤성식. (2011). 정부회계학: 국가회계와 지방자치단체회계. 파주: 법문사.
- Ball, R., Kothari, S. P., & Robin, A. (2000). The effect of international institutional factors on properties of accounting earning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9(1), 1-51.
- Ball, R., & Shivakumar, L. (2005). Earnings quality in UK private firms: comparative loss recognition timelines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9(1), 83-128.
- Ball, R., & Shivakumar, L. (2006). The role of accruals in asymmetrically timely gain and loss recognition.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4(2), 207-242.
- Basu, S. (1997). The conservatism principle and the asymmetric timeliness of earning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4(1), 3-37.
- Cameron, W. (2004). Public Accountability: Effectiveness, equity, ethics. *Australi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63(4), 59-67.
- Garcia Lara, J. M., Garcia Osma, B., & Penalva, F. (2009). Accounting conservatism and corporate governance. *Review of accounting studies*. 14(1), 161-201.
- Garcia Lara, J. M., Garcia Osma, B., & Penalva, F. (2014). Information Consequences of Accounting Conservatism. *European Accounting Review*. 23(2), 173-198.
- Khan, M., & Watts, R. L. (2007). Estimation and empirical properties of a firm-year measure of accounting conservatism.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48(2-3), 132-150.
- LaFond, R., & Watts, R. L. (2008). The Information Role of Conservatism. *The accounting review*. 83(2), 447-478.
- Moore, E. A., & Pfeiffer, R. J. (2004). The effect of financial statement restatements on firms' financial reporting strategies. Available at

SSRN 591333.

- Romanus, R. N., Maher, J. J., & Fleming, D. M. (2008). Auditor industry specialization, auditor changes, and accounting restatements. *Accounting Horizons*. 22(4), 389-413.
- Ruch, G. W., & Taylor, G. (2015). Accounting conservatism: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Accounting Literature*. 34, 17-38.
- Watts, R. L. (2003). Conservatism in accounting - Part 1: Explanations and implications. *Accounting Horizons*. 17(3), 207-221.
- Wilson, W. M. (2008).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cline in the information content of earnings following restatements. *The Accounting Review*. 83(2), 519-548.
- Wolk, H. I., Dodd, J. L., & Rozycki, J. J. (2013). *Accounting Theory: Conceptual Issues in a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 of
Accounting Errors of
Government Financial
Statements on Accounting
Conservatism

Lee Hae In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accounting errors in government financial statements on accounting conservatism. It is essential to secure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government financial statements which are important for the efficient evaluation of national finance and the provision of comprehensive information. But concerns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and related empirical studies are insufficient. Since the accrual principle has been introduced in national accounting, the total amount of errors has been KRW 200

trillion for 9 years. One way to counter this is to adopt accounting conservatism (conservative accounting choices). Accounting conservatism means earnings reflect bad news more quickly than good news. It reduces the agency cost by alleviating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and restores the accounting quality deteriorated due to errors.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is study explored whether the increase of accounting errors would affect conservative accounting choices in the following year because the government could fulfill the accountability by doing so.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42 offices of the central government from FY2011 to FY2020. Accounting errors, which are independent variables, are measured by prior period error corrections, and the number of errors pointed out in the audit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counting conservatism is measured by the allowance rate for bad debts of short-term outstanding bonds, account titles related to gains or losses recognition and valuation of assets.

The first result of the analysis is that the increase of accounting errors strengthened the conservative accounting choices in the following year. Prior period error correction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allowance rate for bad debts of short-term outstanding bonds and account titles related to gains or losses recognition. The number of errors pointed out in the audit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account titles related to gains or losses recognition and valuation of assets. Second, the impact of the status and amount of prior period error corrections on account titles related to gains or losses recognition was stronger for agencies that mainly work with other government agencie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n empirical study is presented about the accounting quality of the government financial statements in terms of accounting errors and accounting conservatism in central government. The result that accounting errors reinforced conservative accounting choices in the following year shows that the government is making efforts on its own to restore the credibility of financial statements, resolve information asymmetry with the public, and ultimately realize public accountability. In addition, by empirically analyzing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type of agencies, it was found that agencies that mainly work with other government agencies are more likely to use a device called accounting conservatism to resolve strong information asymmetry with the public when accounting errors occur. Thus, this study has academic significance in that it expanded the relative literature by conducting quantitative analysis on accounting errors of public sector, and supplemented the methodology in the evaluation of national accounting quality.

keywords : national accounting, government financial statements, accounting errors, accounting conservatism, accountability

Student Number : 2021-23038